

EARS Series 2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 EAI · CCFR · CIDE · COMEXI 국제대외인식여론조사

이내영 · 정한울 · 정원철(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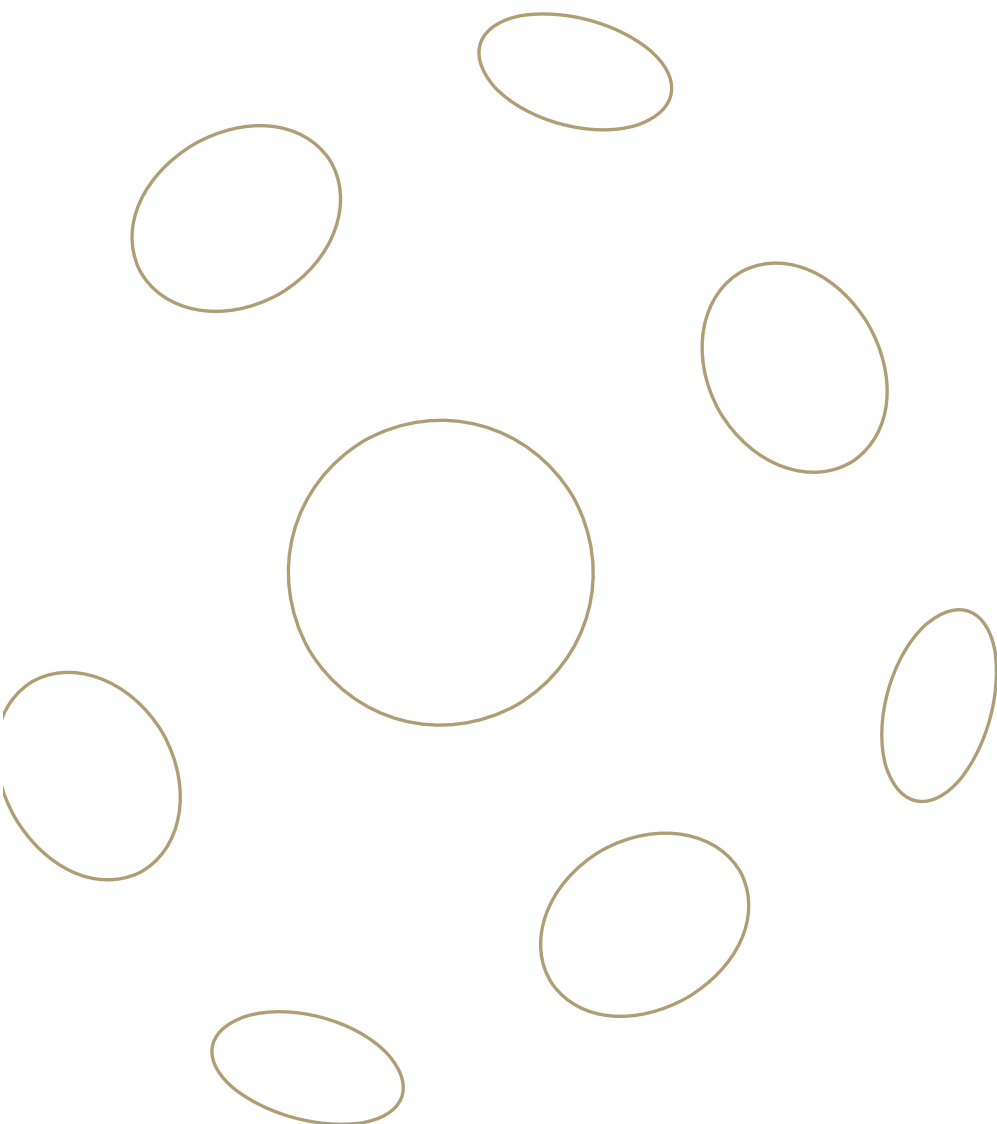
East Asia institute Research and Survey Series 2

EARS Series 2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 EAI · CCFR · CIDE · COMEXI 국제대외인식여론조사

이내영 · 정한울 · 정원철(공저)





Global Views 2004

“권한과 책임을 그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고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워주며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리버럴리즘이 EAI의 이상이다. EAI는 리버럴리즘이 지배하는 사회만이 디지털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진다고 확신한다.”

EARS Series ② EAI · CCFR · CIDE · COMEXI 3개국 대외인식 여론조사

Global Views 2004: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발행인 : 이흥구

편집인 : 주영아

발행처 : 동아시아연구원

디자인 : 김현경

저 자 : 이내영 · 정한울 · 정원철

발행일 : 2005년 5월 11일

정 가 : 5,000원

Copyright © 2005 by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Global Views 2004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Contents

보고서를 펴내며 _ 04

요약문 _ 05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_ 09

- I. 서론 :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_ 10
- II. 한국사회의 대미인식 : 변동과 양극화 사이에서 _ 13
- III. 한미동맹 위기론 : 그 허와 실 _ 20
- IV.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분화하는 대미인식 _ 32
- V. 결론 _ 38

참고문헌 _ 45

부록 1. 조사방법 개요 _ 48

부록 2. 조사 설문지와 빈도표 _ 50



| 보고서 를 펴 내 며 |

외교가 곧 내정이 되고 내정이 곧 외교가 되는 지구촌 시대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동참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가 국내의 주요 이슈가 되는 현실을 통해 세계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을 절감하게 된다. 이제 국내여론 뿐 아니라 국제여론의 추이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AI는 2003년 초에 국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함께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과 주체가 철저하게 국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고, 주제 있어서도 국내 정치문제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 영역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2004년 7월에 실시한 한국·미국·멕시코 3개국 대외인식 여론조사 프로젝트 “Global Views 2004”가 이러한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EARS Series 2 :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은 그 첫 번째 연구 성과로서 여론분석센터의 이내영 소장과 정원철·정한울 선임연구원이 공동작업을 한 결과이다. EARS 2는 그동안 한국사회에 존재하던 반미여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환국면에 직면한 한미동맹과 여론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끝으로 공동여론조사의 기획에서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우선 공동여론조사 프로젝트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해준 중앙일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장기간 프로젝트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김하정 연구기획실장, 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강우창 군을 비롯한 연구원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연구 조교로 굳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준 김영화, 김주은, 김철민, 노유연, 박소영, 이경하, 이고은, 장보문, 조윤경, 허운선 학생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05년 5월

EAI 원장 김 병 국

| 요약 문 |

이내영 (EAI 여론조사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미동맹관계는 새로운 환경과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이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동맹의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존립근거 및 성격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화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국민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반미여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2004년 7월에 실시한 EAI·CCFR·CIDE·COMEXI가 공동기획한 “Global Views 2004 : 한국·미국·멕시코 3개국 대외인식 비교연구” 자료 중 한국과 미국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미동맹관계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론변화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한다.

| 반미여론의 특징 : 변동과 양극화 사이에서

우선, 한미 군사동맹을 대표하는 주한미군의 문제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발전방향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반미여론이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별로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반미’ 여론이 공고화되었다는 가정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에는 대미인식이 있어 세대별·이념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왔고, 특히 최근에는 반미 이슈가 한국사회의 이념적·정치적 균열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즉 젊은층·진보층일수록 자주적 외교노선 및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정책을 선호하고 기성세대·보수층일수록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주둔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념별·세대별로 양극화된 대미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 사회내의 반미여론을 고정된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대미정책 선호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이념분포 자체가 시기별로 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간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고 국내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 한미동맹 위기론 : 그 허와 실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이 미국의 정책결정자집단과

일반 국민사이에 ‘협한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주한 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과정을 가속화하여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가져온다는 한미동맹위기론의 인식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한미간 상호인식을 보면 한국 국민들과 여론주도층 모두 미국을 한국이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았으며 중국이 그 다음이었다. 호감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안보에 대한 영향력과 유용도평가에서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 보다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 대안론’ 역시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위협인식 차원에서도 양국 사이에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9·11테러 이후 부상하고 있는 국제테러리즘과 (북한) 핵 확산 문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시 한국 국민들과 여론주도층은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과 여론주도층 역시 미군의 개입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다만 미국 국민들은 단독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에 대한 참여인식격차가 나타났다. 즉 한국 정부

와 국민들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나 군사행동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을 체감하면서도 남북 간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최대한 피하고 외교적 수단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은 이보다 실질적으로 북한핵과 WMD 확산 위협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는데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 한미동맹 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호신뢰와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면 최소한 국민여론 차원에서 현 국면을 한미동맹의 위기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 한미동맹의 재편과 다원화되는 대미인식

우리는 국내 여론변화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군사적 변환이 보다 직접적으로 한미 동맹의 전환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변환전략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에 기초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 변환과 감축과정은 한편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후자의 경우 미국의 군사능력이 수(數)가 아닌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기동 능력 및 고도의 타격 능력 향상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안보공백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결과 한국 국민들과 여론주도층은 지역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과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론주도층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안보 약화로 귀결될 것으로 본 반면 일반대중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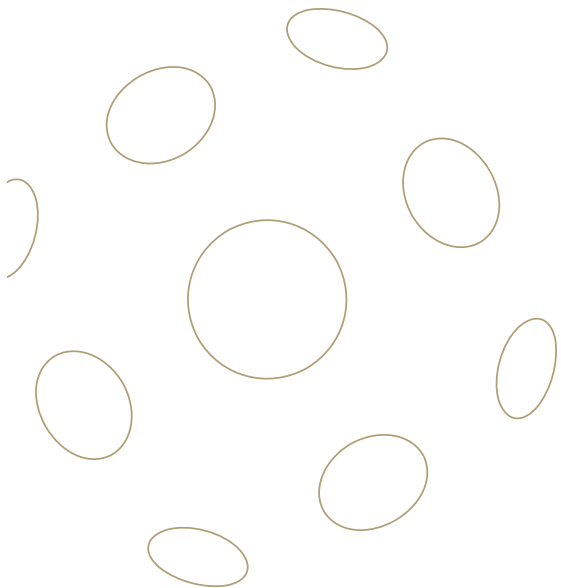
이러한 주한미군 변환과정은 한국국민들의 인식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조사결과 현재 진행되는 주한미군 감축과정을 국민들의 60%가량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반미여론의 확산

이나 안보불감증의 확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철수’ 주장이 과거처럼 진보진영의 전용물이 아니며 오히려 미군의 변환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차원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주한미군 주둔을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층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안보위기로 평가하는 전통적 입장과 미국의 변환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인식의 분화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반미냐 친미냐’ 혹은 ‘동맹이냐 자주냐’의 이분법적 분석틀로는 전환기에 처한 한미관계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lobal Views 2004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동아시아연구원(EAI) · 시카고 외교협회(CCFR)
한 · 미 대외인식 서베이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I. 서론 :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 II. 한국사회의 대미인식 : 변동과 양극화 사이에서
- III. 한미동맹 위기론 : 그 허와 실
- IV.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분화하는 대미인식
- V. 결론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I. 서론 :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현재 한미동맹이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동맹의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존립근거 및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미동맹관계는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1년 9·11테러와 아프간전쟁, 2002년 반미촛불시위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2003년 이라크 전쟁, 2004년 세계군사태세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한미동맹을 유지해온 제반 제도적 장치들이나 운영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미동맹의 기본 성격과 존립 기반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이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동맹의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존립근거 및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과 미국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12차례의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수정 문제 등을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8월에는 주한미군 제2사단 2여단 소속 3,600여명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가 본격화되는 등 한미동맹의 재편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¹⁾

이러한 한미동맹의 재편을 야기한 원인으로 정치권이나 언론은 직간접적으로 대중여론(public opinion)을 지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사회의 반미여론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소위 ‘한미동맹 위기론’이다.²⁾ 한국에서는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와 제1야당이 이러한 인식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 딕 알렌(Dick Allen), 켄 어델만(Ken Adelman), 찰스 클라우서머(Charles Krauthammer)같은 보수적 논객들이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에서 반미민족주의(anti-American nationalism)에 바탕을 둔 반미여론이 확산되고 이에 한국 정부가 편승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맹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³⁾

한미동맹 위기론은 크게 두 가지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첫째, 급속하게 고조된 한국사회내 반미여론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협한·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양국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동맹의 기초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 국민들 및 정책결정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위협 인식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즉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북한을 더 이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오히려 미국을 한국 국익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안보불감증에 기반한 위협인식의 격차가 반미여론이 고조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고, 실제 주한미군의 주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증대시킨 주된 요인이 된 것이다.⁴⁾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대체로 대중여론의 변화가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에 중요 변수가 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⁵⁾

이와 달리 한미동맹 전환의 직접적인 원인을 국내 정치 차원의 반미여론에서 찾기보다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국제정치차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근본적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9·11테러 이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는 세계초강대국 미국의 전략변화를 초래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의 변환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이 입장은 양국간 동맹관계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을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수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GPR 계획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상황변화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에서 반미여론이 수그러들고 양국 간의 인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동맹의 재편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 역시 반미여론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여론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국민여론과 한미동맹의 전망을 다루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내 반미여론 자체의 단기적 변동은 염두에 두지 않고 2002년 전후의 반미여론을 고정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인식이 강화된 것은 과거 냉전시대나 1980년대, 1990년대에 비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 관련 이슈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대미인식과 관련하여 이념별·세대별 양극화 현상이 반복되면서 반미여론은 이제 구조적이고 공고화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반미문제가 불거진 최근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남북관계나 한미관계·국내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반응하며 대단히 가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양극화 현상의 강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⁷⁾

둘째, 한미동맹관계를 평가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공통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여론 변화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미동맹 위기론’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미동맹

위기론은 대체로 2002년 촛불시위와 이라크 파병 반대시위 등 특정 시점에 동원된 시위규모나 언론에 보도된 다소 극단적인 인터뷰 기사, 그리고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소개된 대미 인식관련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한미동맹 위기론이 내포하는 ‘한국의 반미여론 → 미국 내 혐한 감정 유발 → 한미간 신뢰인식의 악화 → 동맹약화’라는 논리와 ‘한국의 대북인식 변화 → 안보불감증 → 위협 인식의 변화 → 동맹약화’라는 논리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여론조사 뿐 아니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한국의 대미여론이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특정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며 시계열적으로 여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한미동맹관계의 전환 배경을 국내적 여론변화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친미 vs 반미’의 이분법적 인식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라는 국제적 차원의 변수를 소홀히 하는 기존 논의들은 마치 국내변수를 잘 관리하면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동맹재편과 주한미군 변환과정이 양국 국민들의 안보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라는 국제정치적 요인에서 한미동맹 전환의 배경을 찾는 입장 역시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한미동맹의 성격 재조정 과정이 역으로 양국 국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다

루고 있지 못하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미국의 안보전략 및 동맹정책상의 변화가 양국간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9·11 이후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주한미군 감축과 후방배치 과정은 한국 사회 내 대미인식의 분화와 다원화 현상을 강화시키며 이는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이분법적 사고의 실효성을 급격히 감소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험적 연구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7월 미국의 시카고외교협회(CCFR: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 멕시코의 경제연구교육센터(CIDE: Centro de Investigaciony Docencia Economicas), 멕시코 외교협회(COMEXI: Consejo Mexicano de Asuntos Ineracionales)가 동시에 실시한 3개국 대외인식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국제질서·한미양국관계에 대한 동일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인식 비교가 가능하며, 양국 모두 동일문항을 가지고 여론 주도층 대상의 전문가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엘리트 차원의 여론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국내 여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2002년 12월, 2003년 6월에 각각 실시한 EAI·중앙일보 <한미관계여론조사>와 2004년 2월에 실시한 EAI·한국일보 <한미관계여론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CCFR·EAI의 3개국 대외인식 조사는 위의 <한미관계여론조사> 문항을 상당수 포함함으로써 2002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네 시기에 걸친 시계열분석 역시 가능하다.

II. 한국사회의 대미인식 : 변동과 양극화 사이에서

즉 대외인식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나 반미여론의 확대현상을 근거로 반미인식을 일종의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반미여론은 과거 어느 시점보다 그 강도가 높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 1970년대 유신시대나 1980~9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반미 = 용공 = 친북”이라는 냉전 논리에 의해 상당한 제약은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된 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대북억지력으로서의 한미동맹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는 태도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⁸⁾ 특히 2002년 월드컵에 이어 12월 대선을 앞둔 정국 하에서는 두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 및 미국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촉발되어 국내외 언론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 이제 ‘반미’ 문제는 한국사회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된 셈이다.

또한 젊은 세대, 이념적 진보, 높은 교육수준, 노무현 대통령 및 민주노동당 지지층일수록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기성세대, 보수층, 저학력층, 한나라당 지지층일수록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식의 격차가 첨예하게 나타났다. 즉 대외인식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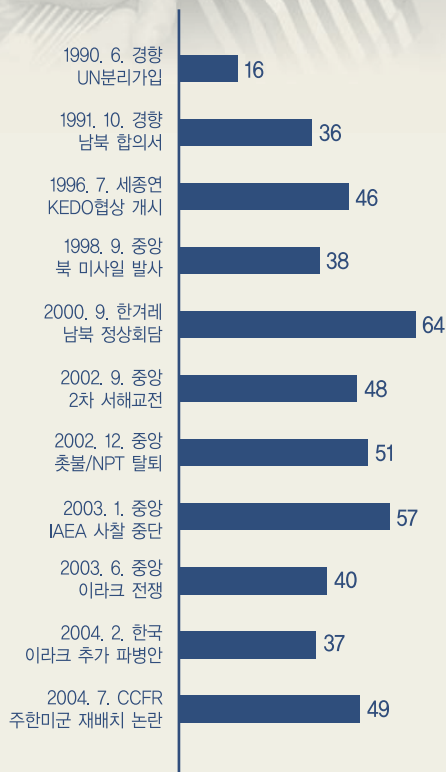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나 반미여론의 확대 현상을 근거로 반미인식을 일종의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면 반미여론이 공고화 되었다는 가설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대미인식의 변동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 철수/감축 입장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반미여론이 공고화되었다는 가정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림 1]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이슈인 남북관계 및 미국과의 관계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 속에서 변동한다는 점이다. 즉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에 접어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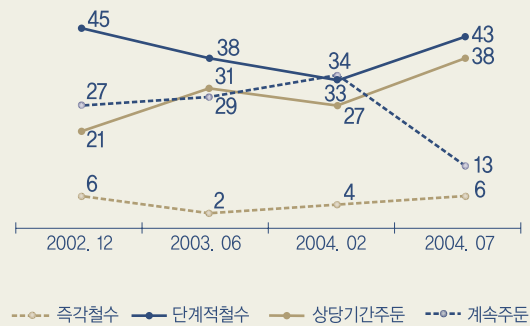
1990년도만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주장은 합해서 불과 16%에 불과했지만 민주화 및 남북

[그림 1]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여론 변화 (단위:%)



* 수치는 주한미군 감축 주장과 즉각 철수 입장에 대한 응답비율 합
 ** 2004년 2월까지의 자료(Lee & Jeong 2004, 25)와 CCFR·EAI(2004,7)자료 재구성.

[그림 2] 한국 국민의 주한미군 인식 변화 (단위:%)



* 자료: EAI·중앙일보(2002, 12, 2003,6), EAI·한국일보(2004,2), EAI·CCFR·CIDE·COMEXI (2004,7)
 ** 모름·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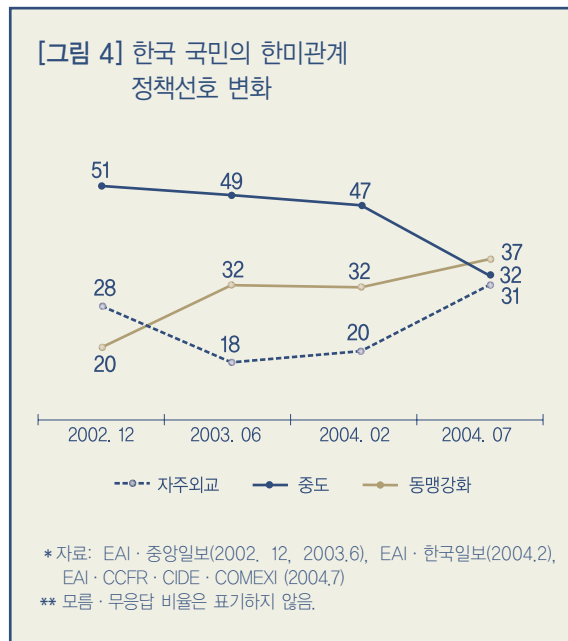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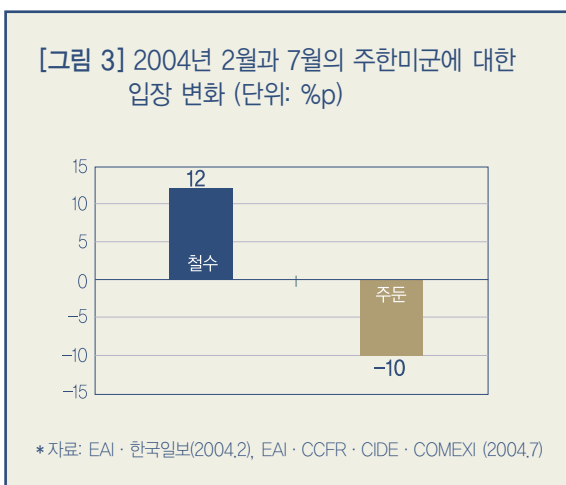
관계가 진전되면서 꾸준히 상승한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주한미군 감축주장은 급격히 상승(64%)했고 2002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직후인 2003년 1월 여론조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반대 여론이 57%에 이르렀다. 문제는 2003년 1월 조사의 경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촛불시위의 여파와 '자주외교'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북한 핵문제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반미 여론의 변화패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7월 조사를 보면 주한미군 철수/감축 주장에 대한 지지가 49%(즉각철수와 단계적 철수의 합)로 증가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년초부터 불거진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이나 스페인, 태국, 필리핀으로 이어졌던 파병국들의 파병철회 결정, 특히 김선일씨 살해사건 등으로 고조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이 반미여론의 강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감축논의가 활성화된 데에는 국내 반미여론 못지않게 미국의 GPR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한미간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을 논의하는 FOTA 회의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의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감축 입장의 강화를 반미여론의 강화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미국의 고위 관료나 한국의 당국자들

이 나서서 이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지난 2년간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에서 2002년 12월에는 ‘단계적 철수(45%)’, ‘즉각 철수(6%)’ 의견이 ‘상당기간 주둔(21%)’, ‘계속주둔(27%)’의 합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2003년 6월, 2004년 2월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긍정적 견해(상당기간 주둔, 계속주둔의 합)가 꾸준히 증가(2003년 6월 60%, 2004년 2월 62%)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2004년 7월 조사에서는 긍정적 견해가 다시 51%로 이전 조사에 비해 10%p이상 감소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철수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림 3]을 보면 이러한 변화의 폭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2월과 7월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즉각철수’와 ‘단계적 철수’의 입장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12%p(37% → 49%)가 상승한 반면 ‘상당기간 주둔’ 및 ‘계속 주둔’ 입장을 지지한 집단은 급격히 하락(61% →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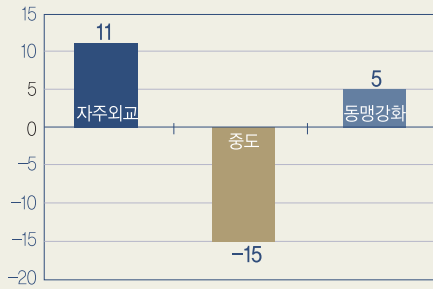


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한미군에 대한 선호분포를 보면 대체로 철수/감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도 최근 2년 동안 응답분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2년부터 불거진 북핵 문제 및 주한미군 변환과정 등 객관적인 안보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이념 · 세대간 갈등이 고조에 달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묻는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2004년 조사에서는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 37%, ‘중도’ 32%,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이 31%이다. 지난 2002년 12월 이후 2003년 6월까지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4년 2월까지 다소 주춤하고 7월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한다. 반면 자주 외교 노선을 지지하는 입장

[그림 5] 2004년 2월과 7월 사이의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 변화폭 (%p)



* 자료 : EAI · 한국일보(2004.2), EAI · CCFR · CIDE · COMEXI (2004.7)
 ** 모름 · 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은 2002년 12월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4년 2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28% → 18% → 20% → 31%)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매번 여론조사에서 중도적 입장이 다수(51%, 49%, 47%)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2%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3년에 주춤했던 양극화 현상이 2004년에 들어오면서 다시 강해지면서 중도적 입장의 입지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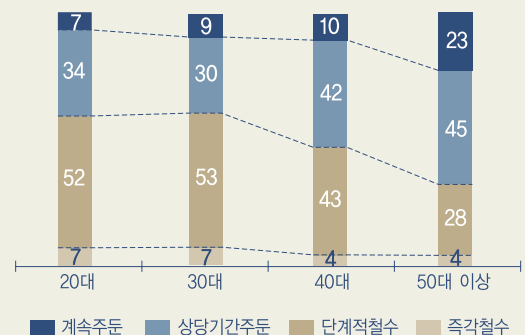
한국 국민들의 대미인식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주한미군에 대한 문항과 바람직한 한국의 대미 외교 방향을 묻는 문항을 검토해본 결과 2002년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응답성향이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반미여론을 고정적이고 공고화된 현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대미인식의 양극화

한국 국민들의 대미인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이념별 · 세대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즉 진보적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보수적이고 기성세대일수록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몇 년동안 대미인식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실용주의적 사고와 중도적인 견해들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중도적 입장의 축소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는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2004년 2월과 7월이라는 불과 5개월 사이에 중도의 비율이 급격히 축소되고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경향을 잘 보여준다. ‘한미동맹 강화입장’은 2004년 2월에 비해 5%p(32% → 37%) 상승한 데 비하여, ‘자주외교 강화’ 입장은 약 11%p 이상(20% → 31%) 상승하였다. 그 결과 ‘중도’ 입장은 급격히 하락(47% → 32%)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그림 6] 세대별 주한미군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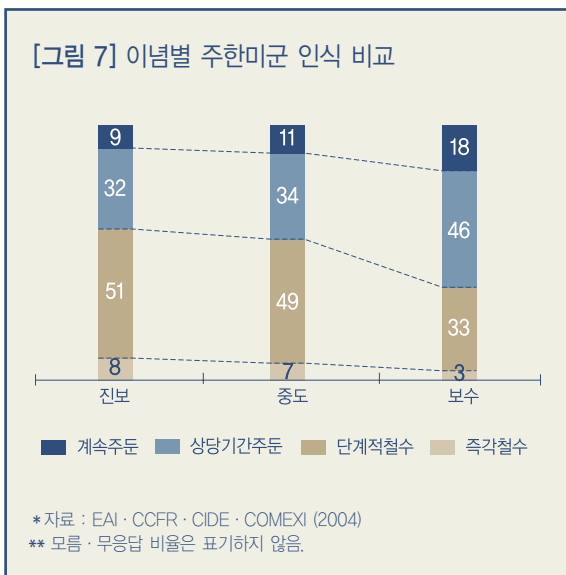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 (2004)
 ** 모름 · 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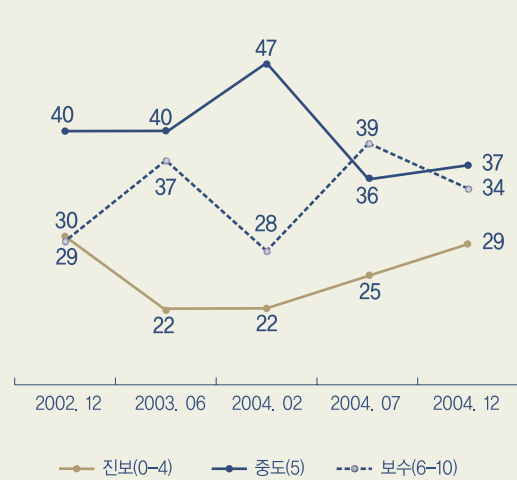
‘중도’의 응답빈도만 보고서도 양극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⁰⁾

세대별·이념별 양극화 현상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정책선호의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세대별 정책선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6]에서 보듯이 20대, 30대의 경우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 지지’와 ‘단계적 철수 지지’를 합친 비율이 약 60%(20대 : 59%, 30대 : 60%)에 달한 반면, 주둔의 필요성을 주장한 응답자는 4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40대의 경우 철수(‘즉각 철수’와 ‘단계적 철수’의 합)와 주둔(‘상당기간 주둔’과 ‘계속주둔’의 합)이 각각 47%, 52%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고, 50대 이상의 경우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32%인 반면 주둔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68%에 달하였다. 젊은 층일수록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부정적이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념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7]에서 처



[그림 8] 주관적 이념성향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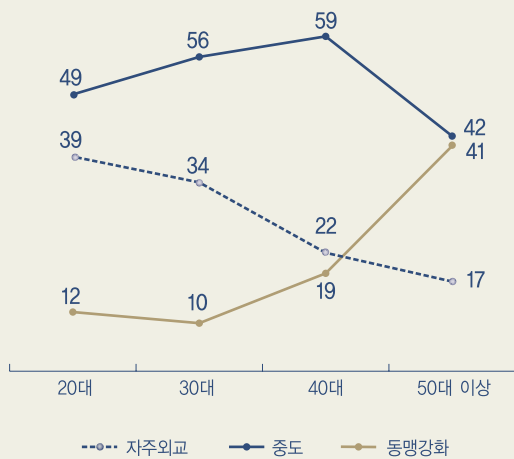
*자료: EAI · 중앙일보 (2002. 12, 2003.6), EAI · 한국일보 (2004.2), EAI · CCFR · CIDE · COMEXI (2004.7), GlobeScan · EAI · 매일경제(2004.12)
** 모름 · 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럼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층은 59%가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8%) 혹은 ‘단계적 철수’(51%)를 지지한 반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64%(상당기간 주둔 46%, 계속주둔 18%)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함으로써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56%(49% + 7%)가 철수를 선호하여 진보적 응답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대미인식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념별·세대별로 나타나는 정치적 선호구조의 격차 현상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젊은 세대의 반미감정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¹¹⁾ 그러나 이념별, 세대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왔다고 사실은 반미여론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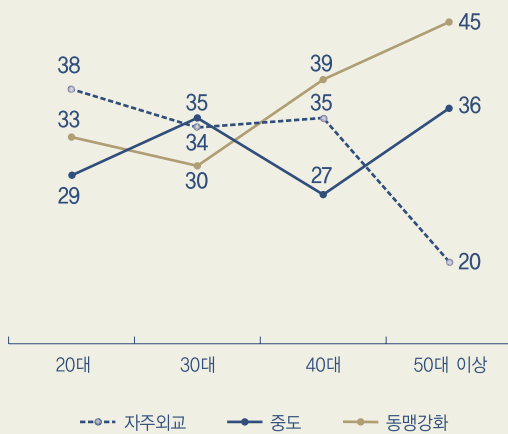


[그림 9] 2002년 세대별 대미관계 선호(%)



* 자료 : EAI · 중앙일보 (2002)
 ** 모름 · 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 10] 2004년 세대별 대미관계 선호(%)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 (2004)
 ** 모름 · 무응답 비율은 표기하지 않음.

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념적·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장기간 구조화되면 정책적 선호 분포가 변동할 여지를 제한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의 정책적 선호는 정치적 리더십이나 캠페인, 이슈와 사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선호패턴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한국 사회에서 대미 여론의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이념 성향 분포 자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 진보 = 반미’, ‘기성세대· 보수 = 친미’라는 공식이 매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이념성향의 분포 자체가 조사 시점의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기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 이념별 각 하위 집단 내에서도 집단의 선호 패턴과는 다른 개인적 선호를 갖거나 선호분포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¹²⁾

[그림8]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2년 사이에 주관적인 자기 이념분포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중도와 보수의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기별로 중도가 늘면 보수가 줄고 보수가 증가하면 중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진보 응답층의 분포는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 사이에 감소한 이래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30% → 22% → 22% → 25% → 29%).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이념집단별로 선호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을지라도 이념별 분포가 변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선호가

변할 수 있다.¹³⁾ [그림9]와 [그림10]에서 2002년 12월과 2004년 7월의 두 시점의 세대별 대미 정책선호를 비교해보아도 20대와 30대의 경우 ‘자주외교’ 노선에 대한 선호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선호를 상회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비중이 자주노선을 선호하는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특징이 지속된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중도적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2004년 조사에서는 중도 노선의 축소 현상이 전 세대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광범위한 중도층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축소하여 2004년에는 양극화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결

- 한미 군사동맹을 대표하는 주한미군의 문제와 바람직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선호의 문향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반미 여론이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별로 상황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동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198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에는 대미인식에 있어 세대별·이념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반미 이슈가 한국사회의 이념적·정치적 균열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즉 젊은층·진보층일수록 자주적 외교노선 및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기성세대·보수층일수록 한미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의 주둔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세대별, 이념별 정책선호에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미여론의 가변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1)시기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 전체의 이념성향 분포 자체가 크게 변화(중도와 보수가 역방향으로 변화하고 진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광범위한 중도층이 존재하고 (3)이념집단이나 세대집단 내에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 강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 결국 한국 국민들의 대미여론의 특징은 이념집단별로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 패턴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상황변화와 여타의 정치적 변수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반미여론을 고정화된 현상으로 과장할 경우 한미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Ⅲ. 한미동맹 위기론 : 그 허와 실

한미관계는 지난 50년간 가장 성공한 동맹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공공연하게 나타나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진단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관계는 지난 50년간 가장 성공한 동맹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공공연하게 나타나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진단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주장의 핵심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식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양국 국민 및 여론 주도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상당부분 오해와 과장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우선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인식 격차의 문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보수진영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제기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이 확산되면서 양국 간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의 수준이 낮아지고 한미동맹의 기초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혈맹’인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등장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현상 자체가 논리적 이유를 불문하고 미국인의 정서를 심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또한 한국의 반미감정이 소위 ‘중국 대안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반미감정 자체와 이를 전제로 한 ‘중국 대안론’이 미국에서 광범위한 혐한감정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¹⁵⁾ 이 글에서는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가에 대해 갖고 있는 호감도를 비교함으로써 반미감정과 혐한감정의 실체를 밝히고 한국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인 인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중국 대안론’이 실제 이상 과장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양국간 위협인식의 격차가 한미동맹의 기초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공통의 위협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공통의 위협인식이 존재할 때 동맹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협인식의 변화는 양국 동맹관계의 존폐를 좌우할 문제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단순히 누구를 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원을 넘어 그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에 차이는 없는지, 위협요인이 가시화되었을 때 동맹으로서 공동행동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미

간 인식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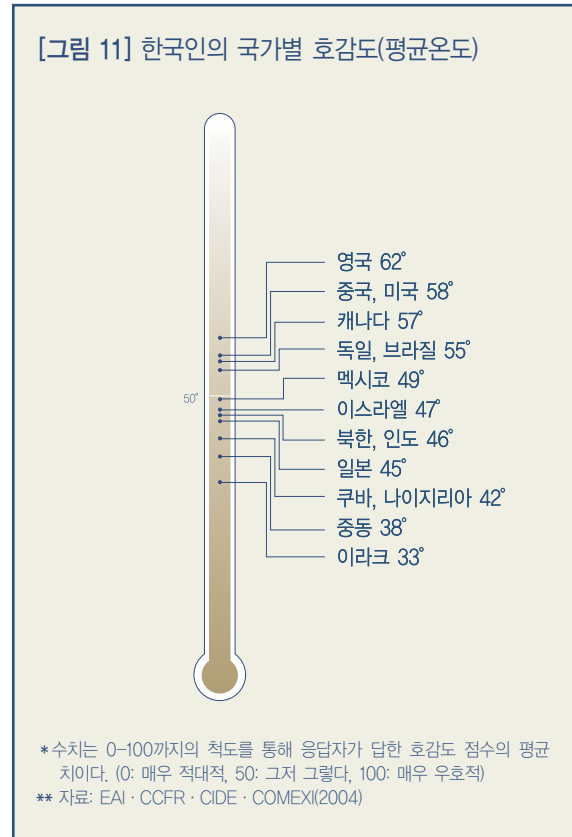
덧붙여 한미동맹 위기론을 검토함에 있어 양국 국민들 차원의 인식비교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대중여론 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는 외교진영 및 엘리트 집단간의 인식차이 역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양국간 엘리트 수준에서의 인식차이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한다.¹⁶⁾

이처럼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양국의 인식격차를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 작업 없이 부분적인 사례를 절대시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한다면 오히려 양국간 불신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의 반미감정과 ‘중국 대안론’은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준인가?

1) 과장된 반미감정(反美感情) · 혐한감정(嫌韓感情)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미감정과 혐한감정이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보면 국가별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평균 58°를 기록하여 영국(62°), 중국(58°)과 함께 미국을 가장 우호적 감정을



느끼는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한편 북한과 일본은 각각 46°, 45°를 기록하여 적대적인 국가군에 포함되었다.¹⁷⁾ 일반 중동인들의 경우 38°, 이라크는 33°를 기록하여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한국인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률 차원에서도 미국에 대해 50°를 넘는 우호적 답변을 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53%를 차지했고, ‘그저 그렇다(50°)’는 24%, 50° 미만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3%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아도 한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의 문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 국민들이 한국인에 대해 갖는 혐한감정

[그림 12] 미국인의 국가별 호감도(평균온도)



*수치는 0~100까지의 척도를 통해 응답자가 답한 호감도 점수의 평균치이다. (0: 매우 적대적, 50: 그저 그렇다, 100: 매우 우호적)
 ** 자료: EAI · CCFR · CIDE · COMEXI(2004)

역시 과장된 측면이 크다. [그림 12]에서 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평균은 49°로 영국(70°), 독일(58°)등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멕시코(54°)나 프랑스(47°), 중국(44°) 등과 함께 중간 그룹에는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은 28°로 미국 국민들에게 물어본 국가들 중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의 우방 사우디아라비아(37°), 쿠바(40°), 이슬람 민중(39°)에 대해서보다 더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50°미만이라는 점에서 미국인의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답분포 면에서는 0~49°의 비우호적 답변을 한 응답자 30%, 50°는 23%, 51°~100°까지 우호적 응답자 31%로 나온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반한감정이나 친한감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한국

[표 1] 미국인의 국가별 호감도(평균온도)

구분	영국	독일	멕시코	이스라엘	한국	프랑스	중국	사우디	쿠바	회교도인	북한
1978	67	57	58	61	48	62	44	48	32	na	na
1982	68	59	60	55	44	60	47	52	27	na	na
1986	73	62	59	59	51	58	53	50	na	na	na
1990	74	62	56	54	47	56	45	53	na	na	na
1994	69	57	57	54	48	55	46	48	38	na	34
1998	69	56	57	55	50	55	47	46	38	na	36
2002	76	61	60	55	46	55	48	33	35	49	34
2004	70	58	54	53	49	47	44	37	40	39	28
2004~ 2002	-6	-3	-6	-2	+3	-8	-4	+4	+5	-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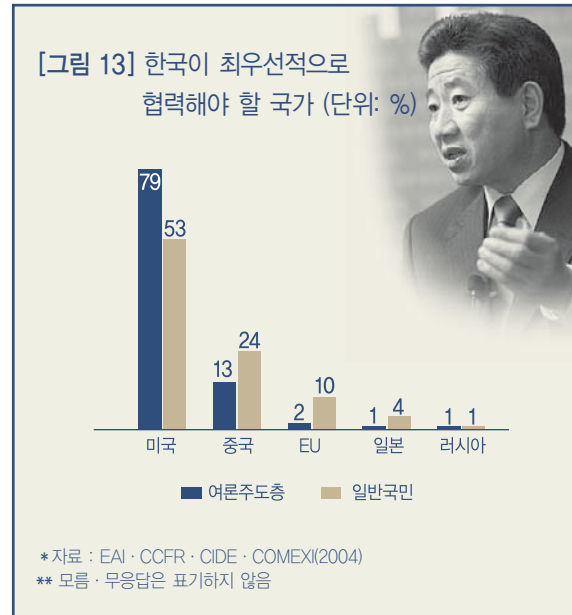
출처: Global Views 2004: US Report (www.ccf.org/globalviews2004/sub/usa.htm)

에 대한 호감도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CCFR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14개국 중 11개 국가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이 떨어졌지만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바와 함께 정서적 호감이 미약하나마 강화된 국가로 꼽혔다. 또한 1978년 이후 한국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이 미국 내 반한감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미국의 반한(反韓) 감정, 혹은 혐한(嫌韓) 감정이 2000년대 들어와 고조된 반미감정에 기인하다는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보여 준다.

2) '중국'은 미국의 대안인가?

한국의 반미여론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보다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강화되면서 일각에서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등장하였다. 소위 '중국 대안론'이 등장한 것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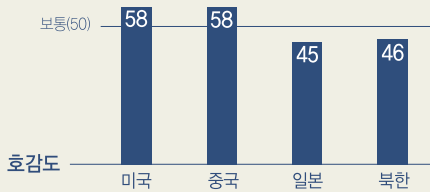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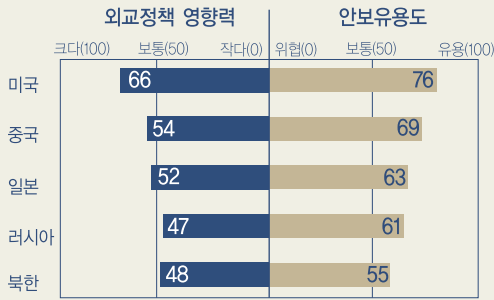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가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 등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화되는 시점에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우선적인 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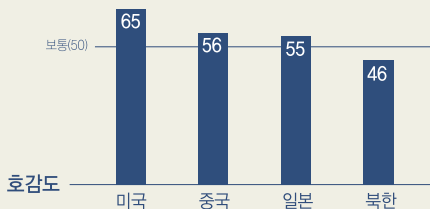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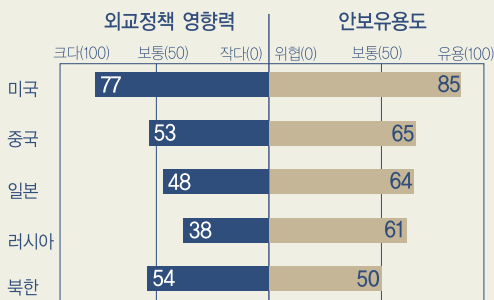
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¹⁹⁾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반미여론에 대한 우려와 달리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53%)을 꼽았다. 특히 여론주도층의 경우 무려 79%가 미국을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로 선정하였다. 일반국민들도 이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데 미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24%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 역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⁰⁾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치는 유용성 항목을 가지고 주변 5개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자. [그림 14]와 [그림 15]에서 평균 점수를

[그림 14] 한국 일반국민 주변5개국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



[그림 15] 한국 전문가들의 주변 5개국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러시아에 대해서는 호감도를 묻지 않음)

내보면 미국에 대해 일반국민은 영향력(66점), 유용도(76점), 전문가의 경우 영향력(77점), 유용도(85점)에서 양 집단 공히 미국을 한국 외교안보에 가장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²¹⁾ 반면 북한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영향력 부문에서는 54점을 얻어 미국에 이어 2위를 했지만 유용도(50점)에서는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일반국민들은 북한을 영향력 부분(48점)과 유용도(55점)에서 모두 하위 그룹에 위치시켰다.

반면 중국은 일반국민(영향력 54점, 유용도 69점)과 전문가 집단(영향력 53점, 유용도 55점)에게 공히 미국 다음으로 한국 안보에 유용한 집단이면서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일반국민들은 영향력 52점과 유용도 63점을 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북한보다도 낮은 48점을 주었다.²²⁾ 러시아 경우 일반국민들(61점)이나 전문가(61점)들 모두 안보차원에서는 유용하다는 인식을 보였지만, 한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국민 48점, 전문가 38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핵심 행위자(core actor)이자 한국 국익에 가장 유용한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반미의 관점으로 환원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이 한중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거나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인식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한미양국 사이에 공동의 위협은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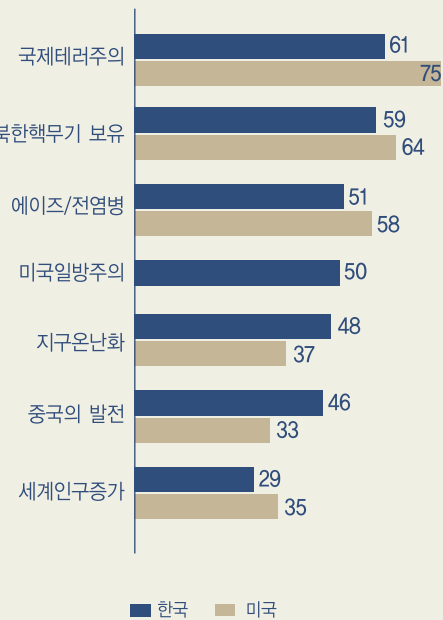
1) 공동의 위협인식 : 테러리즘과 WMD(북핵)의 확산

한미동맹의 위기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국민과 정부 당국자들의 위협인식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고 진단한다(이근 2004). 사실 동맹관계에서 위협인식의 차이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으며 동맹의 기초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위협인식에 대해서 일면적이고 과장된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²³⁾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9·11을 계기로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테러리즘, WMD의 확산, 에이즈 등의 질병, 환경오염 등의 요인들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먼저 비교한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최대 명분인 북한 위협에 대해 양국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그림 16]은 10년 이내에 자국 국익에 최대 위협이 될 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 모두 '국제테러주의'와 '북한 혹은 비우호적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1순위, 2순위로 뽑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²⁴⁾ 일부 논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미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조사문항에서는 누락된 문제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위에서도 테러, 북핵, 에이즈 및 전염병 문제 다음으로 밀리고 또한

[그림 16] 10년 이내 자국 국익의 최대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 인식 비교 (단위: %)



*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문항이 사용하였고 미국의 조사에서는 '비우호국가의 핵강국화'(unfriendly countries becoming Nuclear Power)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 자료: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수치는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미국 내에서도 일방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 자체가 미국의 위협을 북한의 위협보다도 높게 평가의 근거는 아니다. 즉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 국제테러주의와 WMD 확산(북핵 문제)를 최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차이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테러주의나 WMD 모두 최우선의 위협으로 보기는 하지만 국제테러주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협정도는 미국 국민들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 국민들의 75%가 국제테러주의의 문제를 매우 큰 위협으로 보는 반면 한국

국민들은 14%p나 낮은 61%만이 매우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둘째,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48%) 미국 국민(37%)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가 미국 국민에 비해 강하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불과 33%만이 중국이 “매우 위협”될 것이라고 본 반면, 한국 국민들의 경우 무려 46%가 “매우 위협”이라는 응답을 하여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양국 국민들이 국제테러주의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WMD 확산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테러 위협에 대한 체감온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나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잠재적 불안 요인 역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2) 위협억제전략에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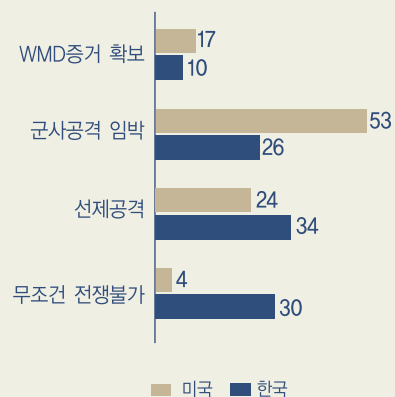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과 수단에 있어서는 양국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 우선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인식차가 있다. [그림 17]에서처럼 미국 국민들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 사용을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4%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은 무려 30%에 달함으로써 전면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가 미국인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18]에서처럼 한국 일반 국민들(50%)과 여론 주도층(55%) 모두 ‘북미간 대화’를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 26%로 같았다. 한편,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여론 주도층의 11%, 일반국민의 21%만이 찬성하였다. 특히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여론 주도층의 5%, 한국 대중의 3%만이 동의하였을 뿐이다. 즉 한국 국민들과 여론주도층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미간 직접대화외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반면 군사적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이나 2003년 발표한 핵태세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국제테러

[그림 17]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의 전쟁 개시조건에 대한 인식비교 (단위:%)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모름 ·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리즘이나 WMD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같은 군사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정부의 강경한 북핵문제 해결책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에 대해 양국간 인식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⁵⁾

한국과 미국의 위협 억제전략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경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한반도가 전장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북핵 시설을 목표로 한 공격이 남북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은 북한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만 주어지고 정권교체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만 피한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북한이 불필요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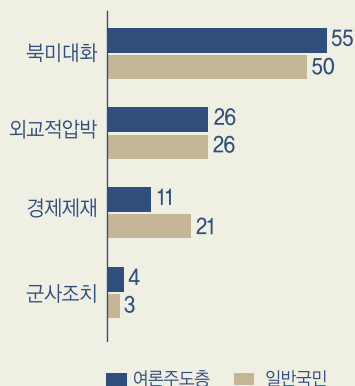
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미 간 근본적 시각 차이는 상당부분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강경수단이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3)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한국의 반미여론 강화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반미여론이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에 대한 약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에 의한 침공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실례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철회와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다. 린스펠드 국방장관은 2004년 싱가포르 아태안보 회의에 참석하여 해외주둔미군 군사변환 원칙을 피력하면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발언을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결국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안보가 미국에게 있어서는 사활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연결된다.²⁷⁾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보다 한국의 안보에 더 치명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미국의 지배적 입장으로 자리잡으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립근거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8] 한국 일반국민과 여론 주도층의 북핵해법에 대한 선호 비교 (단위:%)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모름 ·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 19] 북한의 남침시 미국의 군사지원 여부 (단위:%)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모름 ·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렇다면 양국 국민들은 북한이라는 공동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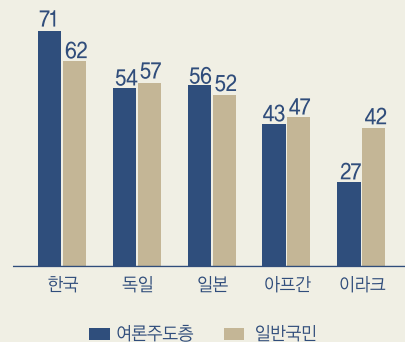
[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대다수 한국인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에게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억제 의지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89%가 북한의 남침시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불과 11%만이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현재 한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교적 마찰이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 국민들과 여론주도층은 최소한 대북억제라는 동맹의 공동목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미국에 의한 동맹 포기(abandonment)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과 미국 여론 주도층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여

론 주도층(71%)과 일반국민(62%) 모두 장기적으로 미군 기지를 두어야 할 국가들 중 1순위로 한국을 꼽았다. 독일 주둔미군과 일본 주둔미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과 WMD 비확산 의지의 상징으로 여전히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보다도 한국에 미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국민들과 여론 주도층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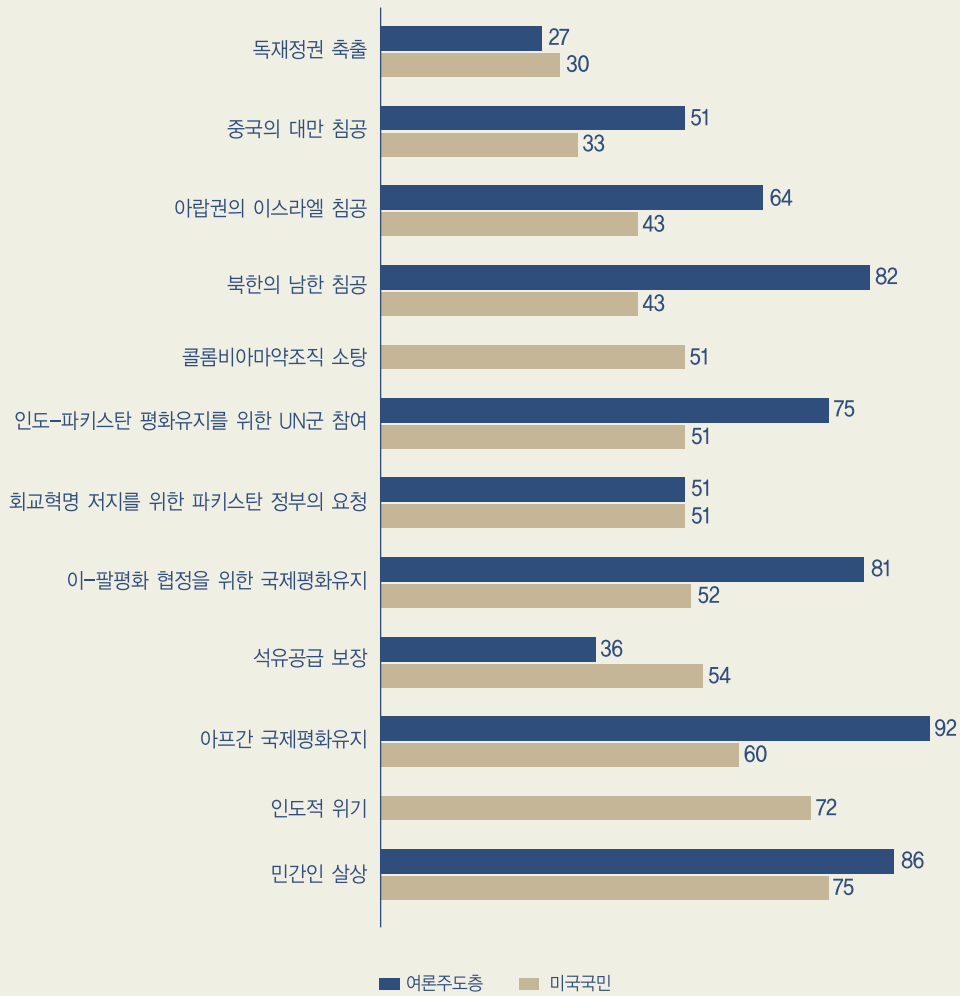
한편 [그림 21]는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미국 국민들과 미국 여론주도층의 지지율을 보여준다. 우선 미국 국민들은 민간인에 대한 살상을 저지(75%)하고 인도적 차원의 위기(72%) 상황에 개입하는데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리고 해당국가의 요청에 의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에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아프간 평화 유지(60%)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유지를 위한 국제평화유지군(52%), 인도-파키스탄 분쟁해결을 위한

[그림 20] 미국 국민과 여론 주도층의 해외 주둔미군에 대한 입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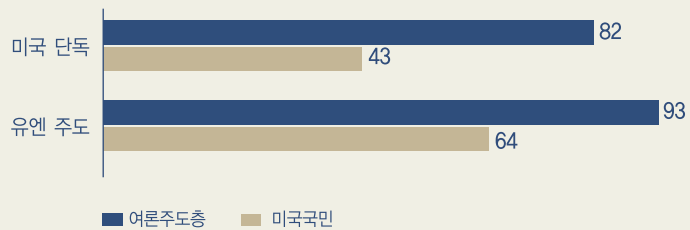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모름 ·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 21] 미국의 군사적 개입 : 미국 일반국민과 여론 주도층 인식 비교



[그림 22] 북한의 남침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 미국 일반국민과 여론 주도층 인식비교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모름 ·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UN군(51%)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남한침공(43%), 아랍의 이스라엘 침공(43%), 중국의 대만침공(33%) 등에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다.

그러나 미국 일반 국민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이행에 소극적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물론 일반 국민들의 경우 여론주도층에 비해 소극적이며 미국 단독행동시에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단독으로 개입하는 대신 유엔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나 많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2]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UN의 주도하에 군대를 구성하여 반격하는 데에는 미국의 일반국민들 역시 64%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여론 주도층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선호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좀 더 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아프간 평화유지군(92%), 민간인 살상(86%)에 이어 북한의 남한 침공시 미국이 무력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려 82%나 지지를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공동대처 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소결 : 한미동맹 강화요인과 불안요인의 공존

-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이 미국의 정책결정자집단

과 일반 국민사이에 '혐한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과정이 가속화하여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가져온다는 한미동맹위기로의 인식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 한미간 상호인식 차원을 보면 한국 국민들과 여론 주도층 모두 한국이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았으며 중국이 그 다음이었다. 호감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한국의 안보에 대한 영향력과 유용도 평가에서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보다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맹 약화의 근거로 제기된 '중국대안론'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협인식 차원에서도 양국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9·11테러 이후 부상하고 있는 국제테러리즘과 (북한)핵 확산 문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시 한국 국민들과 여론 주도층은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과 여론 주도층 역시 미군의 개입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다만 미국 국민들은 단독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간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에 대한 첨예한 인식격차가 있다. 즉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제

재나 군사행동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그것을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우려와 달리 미국의 여론

주도층과 일반국민 모두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공격에 공동대처한다는 안보 공약 이행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IV.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분화하는 대미인식

미국의 군사적 변환전략은 한국 국민들의 인식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던 이분법적 인식구도를 약화시킬 전망이다.

이제까지 주로 한국의 반미여론과 한미간 인식격차를 분석하면서 이 요인들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외교안보전략의 변화와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 보다 직접적으로 한미동맹의 재편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역으로 한국 국민들의 대미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주한미군 변환과 감축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평가와 반응은 대단히 복잡적이다. 보수층의 한편에서는 한국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군사능력이 이제 수가 아닌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기동능력 및 고도의 타격 능력 향상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 진보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던 ‘주한미군 감축/철수’ 주장을 미국측이 주도하는 양상이 되면서 “진보 = 주한미군 감축/철수, 보수 = 주한미군 유지/강화”라는 이분법적 인식틀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들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군사적 변환전략은 한국 국민들의 인식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존재

하던 이분법적 인식구도를 약화시킬 전망이다.

미국의 군사적 변환과 한미동맹

현재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의 방향은 9·11테러 이후 본토방위를 기본축으로 WMD/핵의 확산을 저지하며 테러리즘을 제압할 수 있는 효율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02년 발표한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NSS보고서)에서 반테러전에 대한 동참여부 및 그 적극성에 의해 기존동맹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2003년 11월 25일 부시대통령은 GPR(Global Posture Review)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본토에 대한 공격이라는 9·11 사태의 영향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전략개념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군사적 변환정책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①새로운 위협(테러, WMD 확산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 제고, ②수(數)에 기초하여 특정지역에 고정 배치된 해외미군 구조로

부터 전 세계적 위협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 체제로의 변화, ③고정된 특정국가나 특정지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으로부터 전세계적 위협에 대응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편입된 동맹으로의 재편 등이다. 즉, 특정국가를 적대국으로 상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동맹의 지역적 포괄 범위를 확대하려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경우도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그 수적 감축도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한미동맹의 포괄범위를 한반도 내의 대북역지에 제한하지 않고 한반도를 넘어서 최소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군으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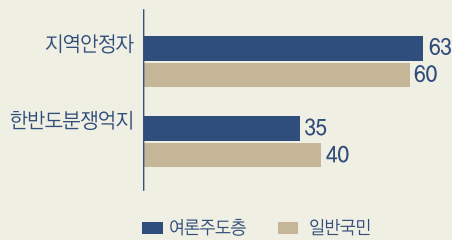
이러한 주한미군 변환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쟁점이 등장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²⁹⁾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이 중국-대만 분쟁 등에 ‘연루(entrapment)’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최근 미국의 변환전략은 21세기 동맹질서의 재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차원에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주한미군이 양안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³⁰⁾

둘째, 우월한 정보능력과 네트워크형 동맹 체제를 활용한 신속기동, 신속결전의 개념이 수(數)와 거점방어 개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즉 효율성과 기동성에 기초한 군사변환이 자칫 기존의 안보균형을 허물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선언한 이후 오히려 군사작전의 난항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전통 안보개념을 바탕으로 군사변환에 소극적이었던 육군을 중심으로 내부반발이 강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간 군사적 대치밀도가 높고 산악지대가 많은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재래전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이러한 우려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제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환과정이 국민인식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변환에 대한 한국 국민의 평가

우선 한미동맹 전환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살펴봐야 한다.³¹⁾ [그림 23]에서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60%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 안정군으로 확대하는

[그림 23] 한국 국민과 여론 주도층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모름 ·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데 찬성하고 있다. 여론 주도층의 경우도 65%가 지역 안정군으로 확대하는 데 지지를 보였다. 일반 국민의 40%, 여론 주도층의 35%만이 한반도 분쟁의 억지에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양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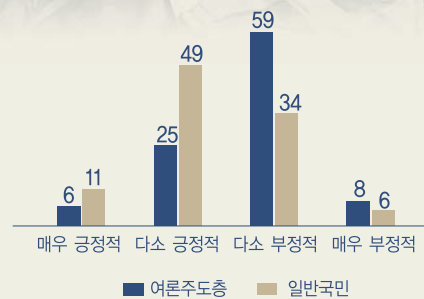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가져오는 “안보공백론”에 대해 일반국민과 여론 주도층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즉 일반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론 주도층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4]에서 일반국민들의 경우 주한미군을 1/3로 감축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오히려 한국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60% : 매우 긍정적 11% + 다소 긍정적 49%)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40%)을 크게 앞질렀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은 주한미군 감축과 변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안보위협이 고조될 때는 대체로 주한미군의 억지력과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심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이다.

그러나 여론 주도층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8%(다소 부정적 59% + 매우 부정적 8%)에 달해 오히려 여론 주도층의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이 안보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여론 주도층의 경우 주한미군이 지역안보로 자기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일반국민 사이에 주한미군 감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 사실을 안보불감증의 확산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반미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 유지 강화의 입장이 51%에 달하고 있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입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못하다. 아니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필요하지만 주둔 규모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

[그림 24] 주한미군의 1/3 감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EAI · CCFR · CIDE · COMEXI(2004)
 ** 모름 ·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의견이 35%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 보고서는 일반국민들이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반미인가 친미인가’ 혹은 ‘안보공백인가 아닌가’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해석보다는 주한미군 변환이슈가 일반국민의 태도를 다원화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한미군 변환 효과 :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의 다원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성격전환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분포를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대결양상을 보면 진보층의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이 실질적으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반면 보수진영은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을 곧 대북억지력의 약화로 해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 반미 = 진보’의 등식이 지금도 여전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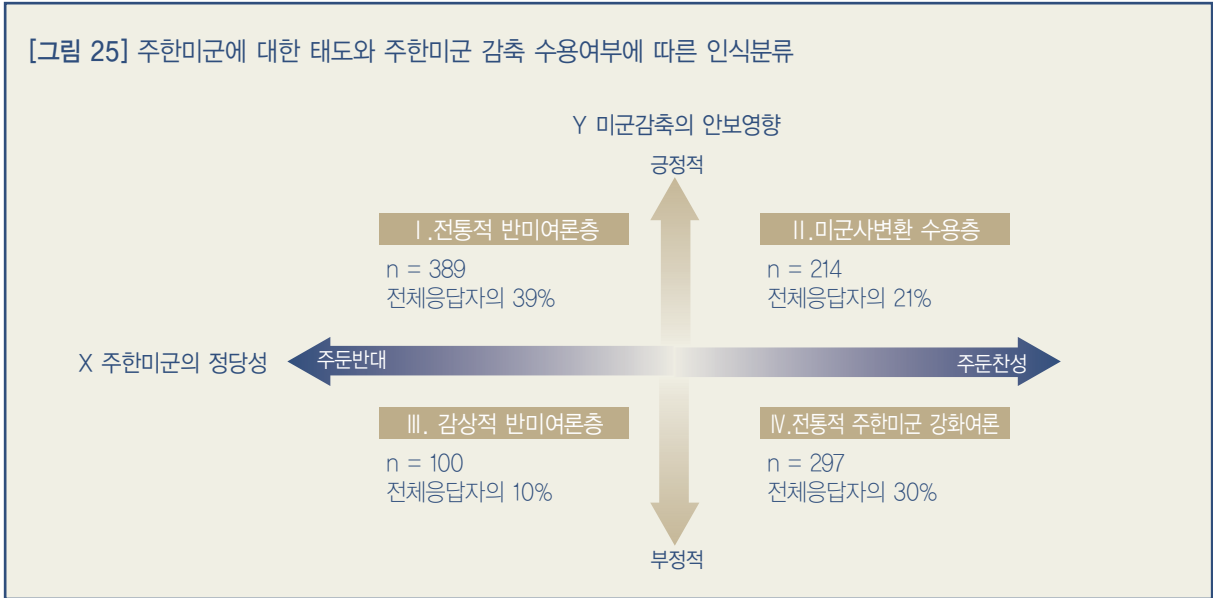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반미전략으로서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를 주장하는 진보적 응답자들과 대북 억지의 담보물로서 주한미군 유지/확대를 주장하는 전통적 입장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에서 진보적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철수/감축을, 보수적이고

나이드는 세대일수록 주한미군의 유지/증강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수층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인식분화 가능성이 커졌다.³²⁾ 주한미군의 감축이 군사변환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층 내에서도 과거와 달리 주한미군 감축에 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부를 한국인들이 대미인식을 측정하는 시금석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주한미군 감축/철수 = 반미 = 진보’의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으며, 같은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라 하더라도 반미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군의 변환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차원에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추적해보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부를 한 축으로 하고 미군감축이 초래하는 안보효과에 대한 평가를 다른 한 축으로 2×2 테이블을 만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5]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여부와 미군감축에 대한 안보영향에 대한 평가라는 두 축을 가지고 응답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잠정적으로 네 유형을 I. 주한미군주둔 반대-감축 긍정평가(전통적 반미여론), II. 주한미군주둔 찬성-감축에는 긍정평가(미 군사변환 수용론), III. 주한미군 주둔 반대-감축 부정평가(감상적 반미여론), IV. 주한미군 주둔찬성 - 감축 부정평가(전통적 보수층)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통적 진보층이 전체 응답자의 39%였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주

[그림 25]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와 주한미군 감축 수용여부에 따른 인식분류



한미군의 감축을 안보공백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보수층이 30%였다. 이 두 입장은 여전히 사회적 양극화의 기본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주한미군 주둔에는 찬성하면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을 안보 공백으로 이해하지 않는 응답자가 21%나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입장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의 변환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집단으로 잠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한편 주한미군 주둔에는 반대하면서도 감축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들을 ‘감상적 반미여론’ 층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주한미군 주둔에는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을 12,500명으로 감축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여기서 ‘감상적’이라는 수사는 주한미군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현실적인 안보 영향에 대한 평가에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이 유형은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과거의 일차원적 분석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포착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인식 분화 현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분류는 보다 면밀하게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최소한 기존의 일차원적인 분석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대미인식의 다원화 경향도 보여주는 시론적 문제제기로서는 충분히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소결

- 우리는 국내 여론변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군사적 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이 보다 직접적으로 한미 동맹의 전환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변환전략은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개념에 기초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과정은 한편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능력이 이제 수가 아닌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기동 능력 및 고도의 타격 능력 향상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 한국 국민들과 여론주도층의 다수는 지역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및 주한미군의 지역안정자 역할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론주도층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안보 약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았지만 일반대중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 이러한 주한미군 변환과정은 한국국민들의 인식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조사결과 현재 진행되는 주한미군 감축과정을 국민들의 60%가량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반미여론의 확산이나 안보불감증의 확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철수’ 주장이 과거처럼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히려 미군의 변환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사결과 주한미군 주둔을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안보위기로 평가하는 전통적 입장과 미국의 변환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인식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론

따라서 현재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미관계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양국의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관계가 과거 냉전시기부터 유지되어 왔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지난 50여 년간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 중의 하나로 꼽히는 한미동맹관계가 좋건 싫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제도화된 한미관계의 틀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미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양국관계의 발전전략은 앞으로 최소 수 십년간 한미동맹의 구조와 성격을 좌우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미관계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양국의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한미관계의 새로운 미래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의 여론은 다른 어떠한 요인들보다 중요한 핵심변수임에 틀림없다.³³⁾ 물론 중요한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우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³⁴⁾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론의 향배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이 존재해왔으며 그 갈등을 증폭시킨 요인 중의 하나가 한미 양국 여론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이다. 사실 국내적으로 '자주' 나 '동맹' 이냐 라는 논쟁이 이념적인 갈등으로 비화된 데에는 국민여론, 특히 반미여론에 대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탓이 크다. 또한 한국 내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반미여론이 전체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쳐진 탓도 있다.

이러한 주관적 해석과 편견 하에서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미래상을 기획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반미여론과 이를 둘러싼 양극화 현상,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차이 등은 분명 한미관계를 약화시킬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번영,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과거처럼 일방적인 수혜, 피수혜의 비대칭적 관계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공정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가고 있다. 한미관계의 성숙과 새로운 전환에 대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부정적 요소에만 주목한다면 상호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힘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갈등이 긍정적 협력관계의 토대를 잠식하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작업이 대중 여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일반국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과 언론보도가 가정하듯이 2000년대 들어와 남북관계 개선 및 여중생 사망사건 등의 돌발변수들에 의해 반미여론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반미여론이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사실상 반미여론이 대단히 가변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대미인식을 둘러싼 세대간·이념간 양극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기본 균열 양상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대미여론 변동에 따라 균열의 강도와 양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반미여론이 실제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소위 ‘한미동맹 위기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본 보고서의 중요한 발견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미 양국 관계의 건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호감도나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분석의 한 축으로

두고 군사적 동맹관계의 기초가 되는 위협인식을 다른 한 축으로 놓고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여론 사이에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국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근거는 없으며 특히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정책결정에서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고 있다. 양국간 위협인식 및 안보전략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양국 국민들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의 확산과 국제테러주의가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부시 2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과 해결전망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날카로운 인식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한국의 국민여론이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어느 일면만 강조하면 양 국가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오히려 동맹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현재 한미관계는 이미 전환국면에 들어서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한미동맹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분화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미동맹관계가 전환기에 들어서게 된 것이 반미감정의 확산 때문만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의 새로운 군사변환정책과 동맹정책의 변화로부터도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동맹관계의 전환과정이 한국 국민들의 인식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반미냐 친미냐’ 혹은 ‘동맹이나

자주냐'의 이분법적 분석틀로는 전환기에 처한 한미 관계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본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끝).

-
- 1) 한용섭,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 개념”, 『NSP Report③』, 2004년 9월, 동아시아연구원, p1, pp8-12.
 - 2) 포괄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을 위기로 진단하는 논리를 ‘한미동맹위기론’으로 통칭할 수 있겠지만, 위기의 근거로는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여론의 측면에 초점을 둔 본 보고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여기서의 ‘한미동맹 위기론’은 국민들의 반미여론을 한미동맹 약화의 원인으로 진단하는 입장에 한하여 사용한다. 한미동맹 위기론의 기본 논리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국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어 미국의 험한감정을 유발하고 그 결과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동맹관계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일보』2002년 12월 4일자, 『동아일보』2002년 11월 26일자, 동년 11월 29일자 등을 참조할 것. 2000년대의 반미여론에 대한 논의는 Lee Sook-Jong, “Sources of Anti-Americanism in Korean Society : Implications for Korean-U.S. Relations,” eds. Baek Jong-Chun and Lee Sang-Hyun in *Korea-U.S. Relations in Transition : Korea-U.S. Alliance in Retrospect and Prospects for a New Strategic Partnership*, (The Sejong Institute, 2002) ; Kim Sung-han, “Anti-American Sentiment and the ROK-US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5, No.2, Fall, (2003) ; 이내영 · 정한울,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국가전략』, 제 9권 3호, (세종연구소, 2003); Lee & Jeong,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the Korea-US Allia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5 No.2,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Ewha Womans Univ.) pp: 23-40.
 - 3) 현재 한미동맹관계에 부정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는 Armacost, Michael H.,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eds. Daniel I. Okimoto & Michael H. Armacost, (The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2004), p19.
 - 4) 이러한 입장은 Doug Bandow, “Bring the Troops Home: Ending the Obsolete Korean Commitment,” *Policy Analysis*, No.474 (2003)와 Robert Novak, : “Perhaps It's Time South Korea Tried Its Wings,” *Washington Post*, (January 6, 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반면 현 정부의 관료 일부나 여당의 소장파들은 한국 내 확산된 반미여론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한미동맹 위기론과는 상반된 정치적 해석이지만 반미여론이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양 입장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홍석현 신임주미대사는 취임식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의 반미감정은 한국의 국력신장 과정에서 빚어지는 성장통”이며 “한국의 반미감정은 과장되어 왔다”고 밝힘으로써 현 정부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연합뉴스』 2005. 2. 23일자.
- 6)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용섭 앞의 글을 들 수 있다.
- 7) 반미여론의 양극화현상에 대해서는 졸고 Lee & Jeong 앞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 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인의 대북인식이 변화했다는 주장으로는 Kim Byung-Kook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ti-American Challeng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3(2). (Lynne Reinner Publishers, 2003)을 들 수 있다.
- 9) 미국 측의 공식입장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철저하게 GPR 계획에 따른 군사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OTA 회의의 미국 측 대표인 톨리스 미국방차관보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미감정 때문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안보 및 지역안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FOTA 공동발표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AI · SBS 공동기획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과 미국: 제1부 부시2기의 주한미군”편. 2004년 11월 9일 방영분.
- 10) 2004년 2월과 7월 사이에 중도적 입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이해하려면 2004년 3~4월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소위 ‘대통령 탄핵사건과 그에 따른 국론분열 현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11)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동안에도 한국의 반미주의에 대한 초기 연구격인 김진웅과 신기욱의 연구결과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1980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급격하게 반미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당시에 세대간 정책적 태도에 큰 차이가 존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Kim Jin Wung, “Recent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Asian Survey* 29(1989) pp 750-52; Shin Gi-Wook,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36, No.8,(1996) pp795-801을 참조하십시오.
- 12) 현재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이념(ideology)의 개념은 제반 이슈영역에 대해 수직적으로 정책적 태도를 조건 짓는(vertical constraint) 가치정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엄격한 이념 개념은 미시간 학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Campbell et al. 1964). 그러나 여기서는 주관적 이념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 설정한 이념 위치(self-ideology assignment)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주관적 이념평가를 통해서도 특정영역 특히 대미관계나 인권문제에서는 이념적 균열양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Lee & Jeong(2004) 위의 글 참고.
- 13) 2004년 7월 조사시점에서 중도층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무엇보다 2004년 2월부터 한국사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사회분열이 심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2004년 12월 EAI · GlobeScan의 *Global Issues Monitor* 조사결과에서는 진보29%, 중도37%, 보수 34%로 다시 중도와 진보층이 다소 증가하고 보수층은 약간 감소하였다.
- 14) 이러한 주장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소위 “한미동맹 위기론”의 핵심 논지를 이루고 있다. 한편 미국 논자들 중 Armacost는 2001년 초반을 기점으로 한미간 인식차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본다. Doug Bandow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등장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남북간 인식격차의 확대문제를 2000년대의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Dug Bandow, “Bring the Troops Home: Ending the Obsolete Korean Commitment,” *Policy Analysis*, No.474 (2003), pp3-4.

- 15) 중국대안론에 대해서는 Armacost 앞의 글, pp20-21을 참조할 것.
- 16) Armacost는 한미양국관계가 난항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부시행정부와 가장 진보적인 노무현 정부라는 파트너 조합을 지적한다. 두 행정부간 이념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결정적인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엘리트는 북한을 '깡패국가(rogue state)'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의 당국자들은 위협인식과 협력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북미갈등과정에서 중재자(mediator) 역할을 자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불신의 요인이 된다고 본다. 50년 혈맹과 그 혈맹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한국 정부의 태도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동맹과 민족'의 구분은 불가피하며 양자택일적 선택은 끼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하는 여론주도층의 조사결과가 양국의 정부인식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여론주도층 전반의 인식과 정부를 주도하는 인식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인식차이를 고려한다면 '한미동맹 위기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인식격차 문제까지 포괄하는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Armacost 앞의 글, pp21-22.
- 17) 여기서 일본에 대한 수치는 2005년 3월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역사교과서 왜곡과문이 재발하면서 급속하게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여론조사의 조사시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8) 이러한 '중국대안론' 혹은 '중국 중시론'은 열린우리당이 자체 조사한 17대 총선 여당 당선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려 63%가 한국이 대외정책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민여론을 보면 무려 65%가 정치, 안보분야에서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음으로써 CCFR 여론조사결과와 비슷한 응답패턴을 보인 것이다. 집권여당의 인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국민 일반이 중국대안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2004년 6월 22일자.
- 19) 사실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가나무역에 취업 중이던 김선일씨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김선일씨의 납치시점을 사전에 인식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추가 파병안 통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국면이었다.
- 20) 한국의 중국 대안론 역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과대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해석은 위협인식 차원의 분석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그림 16)을 참조할 것. 한국 국민들이 미국국민들보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와는 별도로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등의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대안론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일본도의 중국 배척론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 21) 영향력의 경우 각 국 정부가 한국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0-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며 비교를 위해 이를 다시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다. 한국안보에 대한 유용도는 '매우 위협', '약간 위협', '영향없음', '약간 유용', '매우 유용'이라는 답변에 대해 각각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을 부여하여 각 응답비율을 곱한 후 그 총합을 응답자 수로 나눈 값이다.
- 22) 재미있는 점은 일반국민 조사 결과 일본에 대해 북한보다도 낮은 호감도 점수(45°)를 주어 뿌리깊은 반일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 23) 감정적 차원의 반미가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한국의 반미감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일부 극단적 양상을 일반화시키거나 한국인의 반미감정이 갖는 비합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내에 한국에 대한 또 다른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미국이 보다 진지하게 한국사회의 반미여론에 대해 평가하고 보다 전략적인 대책을 만드는 노력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실제 현재 미

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당부분 과장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확대시키고 있다. Doug Bandow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의 반미감정을 소개하며 “북한 핵개발은 정당하다. 결국 우리는(남과 북) 한 민족이다”라고 한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다던지, “우리의 진정한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극단적 여론을 통해 한국의 반미여론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양국관계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의 글에는 심지어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지난 대선 때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해 북한선박 나포사건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까지 담겨있다. 이후 분석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지겠지만 이는 한국 국민과 여론 주도층 다수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Bandow의 앞의 글 참조.

- 24) 한국의 경우 선택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구체화된 반면 미국에서는 포괄적으로 WMD 확산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상황을 예시함으로써 두 문항 간 의미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감안해서 봐야 한다.
- 25) 김성한 앞의 글 참조.
- 26) 이러한 입장은 미국내 보수적 논객들의 목소리를 통해 증폭되기도 한다. William Safire, Doug Bandow, Robert Novak, Richard V. Allen 등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William Safire, “N.Korea : China’s Child,” *New York Times*, (December 26 2002) ; Bandow 앞의 글 ; Novak 앞의 글 ; Richard V.Allen, “Seoul’s Choice : The U.S. or the North,” *New York Times*, (January 16, 2003).
- 27) 이준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제9권 3호, (세종연구소, 2003) pp39~56과 Charles Krauthammer, “In Defense of Democratic Realism,” *The National Interest*, (Fall 2004), pp15-25.
- 28)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일본을 한국보다 중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용섭 앞의 글; Kurt M. Campbell, “America’s Asia Strategy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eds. Daniel I. Okimoto & Michael H. Armacost,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The Asia Pacific Research Center,2004) pp25-34 ; David S. Maxwell, “Beyond the Nuclear Crisis : A Long Term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Institute for Korean-American Studies, Inc., May 19, 2004).
- 29) 사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불투명한 조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으로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는 반미의 대안으로서 중국을 고려하는 ‘중국대안론’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미국, 중국 공히 한국의 국익실현에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한국의 선택은 일종의 모호성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20일 발표한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 양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요구하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한국으로서는 공식적 입장을 공표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2005년 2월 21일자.
- 30) 미국의 변환전략을 수용한다는 것을 한국의 이익과 자체의 안보전략과 무관하게 미국의 요청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한용섭은 미국의 변환전략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면서도 이 변환전략이 재래전의 비중이 큰 한반도내에서의 군사작전에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그리고 중국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연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도 한반도 안보는 한국군이 지역 안보는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식의 역할분담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용섭 앞의 글.
- 31)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는 현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1)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한국군의 역할 (2) 자주국방역량 강화 (3) 동북아 분쟁관여배제 원칙을 담은

소위 '노무현 독트린' 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지역내 분쟁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동북아시아지역 외부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2005년 3월 9일자.

32) 과거 남북대결의식 만이 존재하던 냉전시대에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가 주한미군 주둔지나 아니면 철수 혹은 감축이나라는 단일축 내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 제기되었다면 탈냉전과 남북화해 무드가 형성되고 특히 미군 스스로 21세기의 새로운 군사변환 전략을 도입하면서 주한미군의 정당성과 안보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축을 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냉전시기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사르토리(Sartori)가 얘기하는 이슈축의 압축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였지만 최근 한미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변화들이 압축된 이슈축의 분화현상을 가져오면서 중층화, 다원화된 인식지형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CCFR Report 2004를 참조하시오.

34) 물론,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때로는 대중여론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책임성을 가지고 소신 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조차 국민여론을 설득하고 올바르게 인도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여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일반국민의 선호구조와 인식, 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논리 개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 김성한 2004, 8월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No.2.
- 이 근 2004, “한미간 위협인식 차이의 허와 실”, 『서울신문』, 2004년 11월 14일자.
- 이내영 2005, “한미동맹의 미래 : 한국과 미국의 위협인식의 격차와 동맹관리의 중요성” (2005년 출간 예정)
- 이내영 · 정한울 2003,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국가전략』제9권 3호, 세종연구소
- 이춘근 2003,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제9권 3호, 세종연구소
- 한용섭 2004, 9월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개념”,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No.3.
- Allen, Richard V., 2003, “Seoul’s Choice : The U.S. or the North,” *New York Times*, January 16.
- Armacost, Michael H. 2004,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eds. Daniel I. Okimoto & Michael H. Armacost, Washington D.C : The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Bandow, Doug, 2003, “Bring the Troops Home : Ending the Obsolete Korean Commitment,” *Policy Analysis*, No.474
- Brooke, James, 2003, “US Soldiers in South Korea Feel Growing Anti-Americanism,”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8.
- Campbell, Angus · Philip E. Converse · Warren E. Miller · Donald E. Stokes, 1964, *The American Voter : An Abridg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mpbell, Kurt M., 2004, “America’s Asia Strategy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eds. Daniel I. Okimoto & Michael H. Armacost, Washington D.C: The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CFR). 2004. *Global Views 2004 : Comparing South Korean and American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 Ford, Peter, 2002, “Is America the ‘Good Guy’ ? Many Now Say, ‘No’”, *Christian Science Monitor*, September 11,
- Han, Young-Sup. 2002. “The Sunshine Policy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A Critical Assessment and Prospects.” Koh, Byung-Chul, ed.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 Kim, Byung-Kook, 2003. "The U.S-South Korean Alliance : Anti-American Challeng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3 No.2, Lynne Reinner Publishers.
- Kim, Jin Wung. 1989. "Recent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Asian Survey* 29
- Kim Seung-Hwan, 2003. "Anti-Americanism in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1.
- Kim Sung-han, 2003. "Anti-American Sentiment and the ROK-US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5 No.2, Fall
- Kim, Taehyun. 2002. "Domestic Supports for the Korea-U.S. Alliance in the U.S. and Korea." In *Korea-U.S. Relations in Transition : Korea-U.S. Alliance in Retrospect and Prospects for a New Strategic Partnership*, eds. Baek, Jong-Chun and Lee, Sang-Hyun. Sungnam : The Sejong Institute.
- Krauthammer, Charles. 2004. "In Defense of Democratic Realism," *The National Interest*, Fall 2004.
- Lee, Nae-Young and Han Wool Jeong. 2004.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the Korea-US Allia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5 No.2
- Lee, Sook-Jong. 2002. "Sources of Anti-Americanism in Korean Society : Implications for Korean-U.S. Relations," In *Korea-U.S. Relations in Transition : Korea-U.S. Alliance in Retrospect and Prospects for a New Strategic Partnership*, eds. Baek, Jong-Chun and Lee, Sang-Hyun. Sungnam : The Sejong Institute.
- Maxwell, David S., 2004, "Beyond the Nuclear Crisis : A Long Term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May 19,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nc.
- Novak, Robert, 2003, "Perhaps It's Time South Korea Tried Its Wings," *Washington Post*, January 6.
-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 The Press, 2003. *Views of a Changing World data.*
- Safire, William, "N.Korea: China's Child," *New York Times*, December 26.
- Shin Gi-Wook. 1996.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36, No.8.

Data

- GlobeScan · EAI 23개국 서베이 데이터, 2004, *Global Issues Monitor*, (조사 : 12월)
- EAI · 시카고외교협회(CCFR) · 멕시코외교협회(CIDE) · 멕시코교육연구센터(COMEXI), 한국 · 미국 · 멕시코 3개국 서베이 데이터, 2004, *Global Views 2004*, (조사: 7월)
- EAI · 한국일보, 2004, 한미관계 여론조사 (조사: 2월)
- EAI · 중앙일보, 2003, 한미관계 여론조사 (조사: 6월)
- EAI · 중앙일보, 2002, 한미관계 여론조사 (조사: 12월)

부록 1. 조사방법 개요

한국 일반국민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미디어 리서치
-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지역 : 전국
- 유효표본 : 1,000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지역추출법 (Multi-Stage Area Sampling)
- 표본오차 : $\pm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 조사기간 : 2004년 7월 5일~16일 (12일 간)

한국 여론주도층 여론조사

- 조사대상 : 정치학자와 정치인 1,500여명
- 유효표본 : 364명(국회의원 및 보좌관 114명, 한국정치학회 소속 정치학자 25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여론조사 프로그램 (면접법 일부 병행 실시)
- 조사일시 : 2004년 10월 18일~10월 30일 (13일 간)

미국 CCFR 일반국민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Knowledge Networks, Inc.
- 조사대상 : 미국 유권자 모집단을 대표하는 KN Panal(1,831명)
- 조사지역 : 전국
- 유효표본 : 1,195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조사
- 표본추출방법 : 패널 무작위 표본추출(Random-Sampling from Panal)
- 표본오차 : $\pm 3\%$ 포인트
- 조사기간 : 2004년 7월 6일~12일 (12일 간)

미국 CCFR 여론 주도층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IPSO-Public Affairs
- 유효표 본: 450명(국회의원100명, 국제정치학 교수 75명, 국제담당 언론인 59명, 외교관료 41명, 종교지도자 50명, 기업인 38명, 노조지도자 25명, 대외정책 분야 이익단체대표 25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
- 조사기간 : 2004년 7월 6일~12일 (12일 간)

부록 2. 조사 질문지와 빈도표

I. 한국인의 국제질서관

문 1-1. 귀하께서는 최근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뉴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문 1-1.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대한 뉴스 관심도

	매우많다	다소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계
결과(%)	16.9	59.4	20.5	3.2	100

문 1-2.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했고 그 결과가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나왔다면, 그럼에도 한국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2. 한국이 WTO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계
결과(%)	48.0	52.0	100

문 1-3.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3.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군사 지원 여부

	예	아니요	계
결과(%)	89.3	10.7	100

문 1-4. 귀하께서는 미국이 국제법 위반이나 침략행위와 맞서 싸우기 위한 '세계경찰'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4. 미국이 '세계경찰'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예	아니요	계
결과(%)	43.8	56.2	100

문 1-5. 귀하께서는 미국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5.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이 과도한지 여부

	예	아니요	계
결과(%)	74.2	25.8	100

문 1-6. 다음 중, 미국에 의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 1-6.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입장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사용은 안됨	오직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핵무기 공격이 아니더라도 핵무기사용가능	계
결과(%)	59.5	35.8	4.7	100

51

문 1-7. 자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7. 전쟁이 정당성을 지니는 경우

	대량살상 무기를 확보중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군사적 공격개시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제공격을 감행해온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된다	계
결과(%)	10.3	25.5	34.4	29.8	100

문 1-8.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8개 항목 각각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에 체크

문 1-8. 북핵시설 파괴 위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계
① 유엔과 우방국, 한국이 모두 찬성할 경우	80.1	19.9	100
② 유엔과 한국은 찬성하고, 우방국이 반대할 경우	38.2	61.8	100
③ 유엔과 우방국은 찬성하고, 한국이 반대할 경우	14.8	85.2	100
④ 유엔이 찬성하고, 우방국과 한국이 반대할 경우	13.5	86.5	100
⑤ 유엔이 반대하고, 우방국과 한국이 찬성할 경우	26.5	73.5	100
⑥ 유엔과 우방국이 반대하고, 한국이 찬성할 경우	22.1	77.9	100
⑦ 유엔과 우방국, 한국이 모두 반대할 경우	9.0	91.0	100
⑧ 유엔과 한국이 반대하고, 우방국이 찬성할 경우	8.7	91.3	100

문 1-9. 만약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개 항목 각각에 대해 그렇다(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다)고 보는지 아니라고 보는지 체크

문 1-9. 미국의 북핵 시설 파괴 위한 선행 조치

	그렇다	아니다	계
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81.6	18.4	100
② 미국 동맹국의 동의	50.2	49.8	100
③ 한국 정부의 동의	74.6	25.4	100

문 1-10. 한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보기의 집단이나 개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최소로 10은 최대로 하여 0부터 10사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10-1. 한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최소0	1	2	3	4	5	6	7	8	9	최대10	평균
① 한국국민	1.2	2.7	7.2	6.1	7.9	20.1	14.0	18.0	14.0	5.0	3.8	5.73
② 한국국회	1.7	3.6	4.1	7.4	5.9	17.8	17.7	18.7	14.8	6.0	2.3	5.79
③ 한국대통령	1.2	1.8	4.1	5.3	6.8	15.0	15.6	18.2	16.5	10.3	5.2	6.26
④ 이익집단	2.1	4.4	7.6	8.9	13.4	25.0	16.4	13.7	6.1	1.7	0.7	4.90
⑤ 시민단체	1.1	3.2	5.0	6.9	12.2	28.6	17.8	12.9	8.5	2.3	1.5	5.27
⑥ 미국정부	0.6	0.7	1.6	4.6	5.5	15.5	14.8	21.6	20.7	9.8	4.6	6.57
⑦ 중국정부	0.9	1.4	4.2	7.8	10.3	26.6	19.7	19.2	7.6	1.8	0.5	5.42
⑧ 일본정부	1.3	2.0	4.3	6.9	13.0	31.0	19.7	14.1	6.4	1.0	0.3	5.18
⑨ 러시아정부	1.9	3.9	7.9	8.9	18.1	30.0	14.0	11.0	3.4	0.8	0.1	4.65
⑩ 북한정부	3.5	4.3	7.1	8.4	12.8	29.6	15.2	11.7	5.2	1.3	0.9	4.78

문 1-11. 만약 중동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이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11. 대다수 중동인이 미군철수 희망 시, 미국의 대처

	철군해야한다	계속 주둔해야한다	계
결과(%)	68.6	31.4	100

문 1-12. 국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유엔(UN)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12. 미국이 UN 테두리 내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
결과(%)	84.7	15.3	100

문 1-13. 한국이 분쟁 지역에 대한 유엔(UN)국제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13. 한국이 UN국제평화유지군 참여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
결과(%)	82.6	17.4	100

문 1-14. 국제적 보건을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강제적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1-14. WHO의 강제적 조사권 행사에 대한 의견

	긍정적이다(찬성)	부정적이다(반대)	계
결과(%)	74.6	25.4	100

문 1-15. 국제무역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근로조건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15. 국제무역협정 가입 국가의 근로조건 최소 기준 유지 필요성

	예	아니오	계
결과(%)	88.6	11.4	100

문 1-16. 다음의 국가들이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개 국가 각각에 대해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체크

문 1-16. 한국과의 무역에서 국가별 공정성 여부

	공정한 편이다	불공정한 편이다	계
① EU(유럽연합) 국가들	57.2	42.8	100
② 일본	33.0	67.0	100
③ 미국	28.1	71.9	100
④ 중국	50.9	49.1	100
⑤ 멕시코	49.2	50.8	100

문 1-17. 그럼, 다음 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 한국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개 국가 각각에 대해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체크

문 1-17. 각 국가와의 무역에서 한국의 공정성 여부

	공정한 편이다	불공정한 편이다	계
① EU(유럽연합) 국가들	74.3	25.7	100
② 일본	57.8	42.2	100
③ 중국	62.2	37.8	100
④ 멕시코	52.7	47.3	100
⑤ 빈곤 국가들	47.3	52.7	100
⑥ 미국	52.0	48.0	100

문 1-18. 지구촌 다른 나라와의 경제 관계를 밀접하게 맺는 세계화가 한국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18. 경제관계를 밀접하게 맺는 세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유익함)	부정적 영향(해로움)	계
결과(%)	81.4	18.6	100

55

문 1-19. 정부가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1-19. 정부의 농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긍정적(찬성)	부정적(반대)	계
결과(%)	86.9	13.1	100

문 1-20. 한국이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한국의 장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20. 한국의 국제문제 적극 개입이 긍정적인지 여부

	예	아니오	계
결과(%)	83.4	16.6	100

II. 한-미 관계

문 2-1.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2-1. 주한미군에 대한 의견

	한국에 영구적으로 주둔해야한다	한국에 상당한 기간동안 주둔해야한다	주한미군은 점차적으로 축소해야한다	즉각적으로 철수해야한다	계
결과(%)	13.1	38.0	43.1	5.8	100

문 2-2. 현재 한국에는 37,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 2-2.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의견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적당하다	계
결과(%)	34.8	7.7	57.5	100

문 2-3. 미국은 주한미군의 수를 1/3 가량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 2-3.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계
결과(%)	11.2	49.1	33.8	5.9	100

문 2-4.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2-4. 주한미군의 역할

	한반도 주변지역의 안정에 기여해야	북한의 남침억제 역할만 해야	계
결과(%)	60.3	39.7	100

문 2-5. 현재,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기에서 귀하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문 2-5.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의견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파병반대	추가파병에 부정적이 지만 국제적 약속인 만큼 파병시행해야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파병찬성	계
결과(%)	36.8	56.0	7.2	100

문 2-6.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2-6. 추가파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한-미관계	이라크전의 정당성	이라크파병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한국군의 안전	계
결과(%)	18.3	16.2	19.7	45.8	100

문 2-7. 바람직한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미국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 외교 정책 추진을 지지하시면 '0' 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지지하시면 '10' 으로, 현재의 수준을 지지하시면 '5' 를 기준으로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2-7.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 평균

	미국의 간섭없는 독자적 외교정책추진			현재수준 유지				한미동맹 강화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결과(%)	5.8	2.1	5.3	9.6	8.3	32.0	13.5	13.0	6.4	2.3	1.7	4.96

문 2-8. 한-미 동맹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2-8. 통일 이후 한미동맹 지속에 대한 견해

	더욱 강화되어야	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대폭적으로 약화되어야	종료해야	계
결과(%)	6.0	53.5	31.4	9.1	100

문 2-9.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 공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가장 동의하시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2-9. 미국의 군사적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한 경우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원료를 축적하는 경우	핵무기 원료를 다른 나라에 판매 하려고 하는 경우	핵폭탄 실험을 한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경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 한 경우	어떤경우에도 미국의 선제 공격에 동의 할 수 없음	계
결과(%)	6.0	15.0	20.2	13.1	7.0	38.7	100

문 2-10. 보기의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2-10.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없다	계
결과(%)	52.9	4.4	23.8	0.5	9.9	8.5	100

문 2-11. 북핵사태(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보기의 나라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 6개 국가 각각에 대해 그 나라 역할의 중요성 정도를 체크

문 2-11. 북핵 해결에 대한 각국의 역할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별로 중요 안함	전혀 중요 안함	계
① 중국	37.2	55.7	6.3	0.8	100
② 미국	58.4	34.4	6.0	1.2	100
③ 러시아	17.6	52.3	28.0	2.1	100
④ 일본	17.0	56.8	23.8	2.4	100
⑤ 한국	57.6	36.6	5.4	0.4	100
⑥ 북한	54.7	37.6	6.7	1.0	100

59

문 2-12. 한국의 안보에 있어 보기의 나라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6개 국가 각각에 대해 그 나라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체크

문 2-12. 한국 안보에 대한 각국의 영향력

	매우 위협	약간 위협	영향 없음	약간 유용	매우 유용	계
① 중국	2.0	14.9	12.2	48.4	22.5	100
② 일본	3.0	15.6	23.8	43.9	13.7	100
③ 북한	15.9	25.5	9.6	21.9	27.1	100
④ 미국	3.5	8.8	9.6	36.3	41.8	100
⑤ 러시아	1.0	15.5	32.7	40.9	9.9	100

문 2-13. 보기의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6개 국가 각각에 대해 그 나라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체크

문 2-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각국의 영향력

	매우 위협	약간 위협	영향 없음	약간 유용	매우 유용	계
① 중국	0.8	14.0	12.5	49.2	23.5	100
② 일본	1.6	14.1	27.7	43.3	13.3	100
③ 북한	9.7	22.1	8.8	23.3	36.1	100
④ 한국	0.2	2.4	12.3	34.5	50.6	100
⑤ 미국	3.0	7.6	12.8	39.6	37.0	100
⑥ 러시아	0.7	12.8	32.9	43.5	10.1	100

문 2-14. 귀하께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2-14.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관계 평가

	매우 악화됨	조금 악화됨	변화없음	조금 진전됨	매우 진전됨	계
결과(%)	4.1	27.2	53.5	14.0	1.2	100

III. 한국의 외교 · 안보

문 3-1. 귀하께서는 북한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3-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햇볕정책 강화	현재수준 유지	햇볕정책포기와 강경정책채택	계
결과(%)	29.1	52.1	18.8	100

문 3-2. 귀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3-2.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
결과(%)	75.4	24.6	100

문 3-3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까?

문 3-3.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 위협 정도

	매우 심각	약간 심각	위협을 느끼지 않음	계
결과(%)	38.5	49.1	12.4	100

문 3-4. 귀하께서 보시기에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3-4.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북-미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군사적 조치를 통해	계
결과(%)	50.2	25.6	21.4	2.8	100

문 3-5. 귀하께서는 북핵 사태에 대해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문 3-5. 북핵 사태에 대한 전망					
	조만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	협상을 통해 결국 북한은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할 것	핵무기개발중단 거부로 한반도 둘러싼 군사적 갈등점화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대한 알지만 북한과 공생도 가능할 것	계
결과(%)	9.4	52.3	18.9	19.4	100

문 3-6. 귀하께서는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문 3-6. 북한 정권에 대한 전망				
	몇 년 안에 붕괴될 것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정권은 결국 붕괴할것	북한정권은 지속될 것	계
결과(%)	7.2	74.1	18.7	100

문 3-7. 통일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 3-7. 통일에 대한 의견				
	어떤뎡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뤄야	통일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세불안과 경제 문제로 인해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
결과(%)	21.9	68.9	9.2	100

문 3-8. 통일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개발에 쓰일 재원 조달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 3-8. 통일 비용 조달 위한 세금 부담 용의				
	기꺼이 부담한다	약간의 부담은 개의치 않는다	별로 부담하고 싶지 않다	계
결과(%)	16.3	53.8	29.9	100

문 3-9. 귀하께서는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 3-9.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견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제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인도적 목적에만 한정되어야	현재의 수준으로는 유지되어야	더욱 확대 되어야	계
결과(%)	23.7	49.8	21.5	5.0	100

문 2-10.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방 예산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2-10. 국방 예산 규모에 대한 견해

	너무 적다	약간 적다	적당하다	약간 많다	너무 많다	계
결과(%)	2.0	11.8	51.7	29.1	5.4	100

문 3-11. 한국은 북핵사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3-11. 북핵 사태에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 기대 정도

	전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약간은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없다	계
결과(%)	12.2	78.5	9.3	100

문 3-12.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을 없애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연합(EU)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3-12.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
결과(%)	66.2	33.8	100

문 3-13. 미국의 참여 없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3-13. 미국 참여없는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설립에 대한 견해

	적극 찬성	찬성	반대	적극 반대	계
결과(%)	18.6	58.7	20.4	2.3	100

문 3-14. 다음 블러드리는 각각의 문장을 듣고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 10개 문장 각각에 대해 동의하시면 '예'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니오'에 체크

문 3-14

	예	아니오	계
①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을 늘여야 한다	61.1	38.9	100
②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55.7	44.3	100
③ 모든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추방되어야 한다	30.8	69.2	100
④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74.5	25.5	100
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내 쌀 시장은 보호해야 한다	77.9	22.1	100
⑥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50.7	49.3	100
⑦ 세계화 시대에 국산품애용이란 시대착오다	41.1	58.9	100
⑧ 국내에서 외국기업 주도의 인수·합병은 우리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	42.8	57.2	100
⑨ 약소국은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UN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신뢰해선 안 된다	44.4	55.6	100
⑩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외국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64.9	35.1	100



문 3-15. 보기에 있는 나라와 국민에 대해 귀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저 그렇다’ 인 50을 기준으로 ‘매우 우호적’ 인 경우에는 100, ‘매우 적대적’ 인 경우에는 0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을 0에서 100사이의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 5개 각 국가별로 해당 점수를 괄호 안에 기입

(잘 모르는 나라이거나 의견이 없는 경우: 997,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998, 답하기 싫으신 경우: 999)

문 3-15. 나라와 국민에 대한 감정(100점 기준)

	북한	독일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이라크	인도	캐나다
결과(%)	45.58	55.03	45.13	48.80	46.50	32.92	46.24	57.38

	브라질	영국	중국	미국	쿠바	나이지리아	중동인(이슬람교도)
결과(%)	55.41	61.61	58.28	57.54	41.55	41.62	38.16

문 3-16. 보기에 있는 국제기구나 조직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저 그렇다’ 인 50을 기준으로 ‘매우 우호적’ 인 경우에는 100, ‘매우 적대적’ 인 경우에는 0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을 0에서 100사이의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 12개 국제기구/조직별로 해당 점수를 괄호 안에 기입

(잘 모르는 기구이거나 의견이 없는 경우: 997, 확실치 않은 경우: 998, 답하기 싫으신 경우: 999)

문 3-16. 국제기구나 조직에 대한 감정(100점 기준)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연합 (UN)	세계은행	다국적기업	유럽연합 (EU)	국제통화기금 (IMF)
결과(%)	57.65	62.92	57.73	53.24	57.25	55.81

	국제엠네스티 포함한 국제인권단체	국제사법 재판소	북미자유 무역협정 (NAFTA)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결과(%)	61.90	57.12	52.08	65.07	58.46	60.32

문 3-17. 보기에 있는 항목들은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국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12개 항목 각각에 대한 위협가능성 체크

문 3-17. 한국 국익에 위협 가능성

	매우 위험	다소 위험	전혀 위험안됨	계
① 중국의 발전	46.3	44.5	9.2	100
② 북한의 핵무기 보유	58.5	35.7	5.8	100
③ 국제 테러주의	60.8	35.1	4.1	100
④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20.5	61.0	18.5	100
⑤ 저임금 국가와의 경제적 경쟁	28.7	58.0	13.3	100
⑥ 지구온난화	48.3	46.5	5.2	100
⑦ 에이즈, 에볼라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전염병의 창궐	50.8	43.9	5.3	100
⑧ 중국과 대만의 갈등	16.3	58.1	25.6	100
⑨ 세계 인구 증가	21.7	57.2	21.1	100
⑩ 미국의 일방주의	50.3	43.4	6.3	100
⑪ 일본의 군사대국화	46.6	46.9	6.5	100
⑫ 중국과 일본의 경쟁	22.8	62.6	14.6	100

IV. 사회경제적 입장과 정치적 태도

문 4-1 얼마나 자주 신문을 읽으십니까?

문 4-1. 신문 열독 정도

	매일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읽지 않음	계
결과(%)	34.8	20.8	17.3	7.2	19.9	100

문 4-2 얼마나 자주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십니까?

문 4-2. TV 뉴스 시청 정도

	매일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시청 않음	계
결과(%)	58.8	28.8	9.9	1.1	1.4	100

문 4-3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문 4-3. 인터넷 이용 정도

	매일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이용 않음	계
결과(%)	28.1	15.9	14.5	7.1	34.4	100

문 4-4. 국내와 국제 문제 이슈에 대한 뉴스를 주로 어디서 많이 얻으십니까?

문 4-4. 국내 국제뉴스 주 습득 경로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인터넷	기타	계
결과(%)	70.4	19.3	0.6	9.4	0.3	100

문 4-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직업직
 화이트칼라: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문 4-5. 응답자의 직업

	농/임 /어업	자영업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가정 주부	학생	무직 /기타	계
결과(%)	3.4	22.3	13.8	21.0	26.7	7.3	5.5	100

문 4-6. 귀하의 학력은?

문 4-6. 응답자의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계
결과(%)	17.1	48.1	34.8	100

문 4-7. 귀하의 현재 월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문 4-7. 응답자의 월간 소득

	없다	100만원 미만	101~200 만원 사이	201~300 만원 사이	301~400 만원 사이	401만원 이상	계
결과(%)	1.1	13.8	25.1	33.6	21.3	5.1	100

문 4-8.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진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0점, '중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5점, '가장 보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10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0점과 10점의 차이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며, 이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 4-8. 응답자의 이념성향

	가장 진보		중도								가장 보수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결과(%)	0.8	1.4	3.9	9.2	10.1	35.5	12.9	12.5	9.9	2.9	0.9	5.34	

문 4-9. 2002년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서 투표하셨습니다?

문 4-9. 2002년 대선 지지후보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기타후보	투표하지않음	계
결과(%)	37.5	42.9	2.4	1.5	15.7	100

문 4-10. 2004년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

문 4-10. 2004년 총선 지지후보정당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새천년 민주당	민주 노동당	기타 정당	투표하지 않음	계
결과(%)	35.2	38.3	2.9	5.5	2.8	15.3	100

문 4-11.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에 투표하셨습니다?

문 4-11. 2004년 총선 지지 정당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새천년 민주당	민주 노동당	기타 정당	투표하지 않음	계
결과(%)	35.1	35.9	2.5	8.9	1.7	15.9	100

문 4-12. 현재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문 4-12.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새천년 민주당	민주 노동당	기타 정당	없다/ 무응답	계
결과(%)	35.9	32.3	1.9	11.8	1.8	16.3	100

EAI · CCFR · CIDE · COMEXI 3개국 공동

대외인식 여론조사 프로젝트

■ EAI 국제회의 준비 및 영문단행본 발간 TF Team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교수 (팀장)
김병국	EAI 원장, 고려대 교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중앙대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Marshall M. Bouton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teven Kull	University of Maryland
Benjamin I. Page	Northwestern University
Robert Y. Shapiro	Columbia University

■ EAI EARS Report 발간 Team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교수
김병국	EAI 원장, 고려대 교수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을	EAI 선임연구원
강우창	EAI 연구원

■ 연구조교

김영화	고려대 대학원
김주은	하와이대
김철민	고려대 대학원
노유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소영	고려대 대학원
이경하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고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장보문	고려대 대학원
조윤경	서울대 국제대학원
허윤선	서울대 국제대학원



100-849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Phone: +82-2-2277-1683
Fax: +82-2-2277-1684
Web: www.eai.or.kr

CCFR Team

The Chicago Council Foreign Relations
116 South Michigan Avenues
10th Floor
Chicago, IL 60603
Phone: (312) 726-3860
Web: www.ccfcr.org

Marshall M. Bouton, Study chair
Catherine Hug
Steven Kull
Benjamin I. Page
Robert Y. Shapiro
Jennie Taylor
Christopher B. Whitney



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s, A.C.,
Division de Estudios Internacionales
Carretera Mexico-Touca No.3655
Col. Lomas de Santa Fe, C.P. 01210
Mexico D.E.
Phone: (5525) 57279862, 57279827
Fax: (5255) 57279872
Web: www.cide.edu

CIDE Team

Susan Minushkin
Ana Golnzalez
Laura E. Cedillo

Guadalupe Gonzalez
Uleses Beltran
Antonio Ortiz Mena



Consejo Mexicano de Asuntos Ineracionales, A.C.
CamposEliseos 345, piso 6
Col. Polanco, C.P. 11560
Mexico D.F.
Phone: (5225) 5279 6087
Fax: (5255) 52796091
Web: www.consejomaxicano.org

COMEXI Team

Andres Rozental
Miguel Basanez

Aurora Adame
Susana Irueg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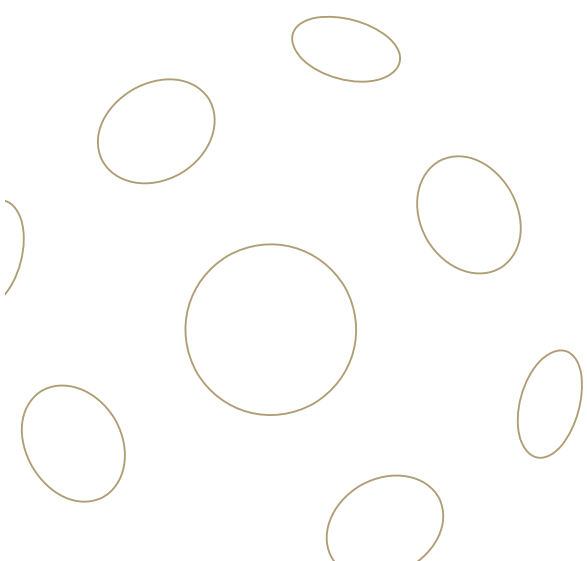
☉ EAI 보고서 시리즈

EARS 시리즈

- ① 노무현 정부 1년 국정평가 : 국민여론과 전문가 평가 (2004. 6. 21)
- ② Global Views 2004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2005. 5. 9)
- ③ Global Views 2004 한국인의 대북인식 : 평가와 전망 (근간)
- ④ Global Views 2004 한국인의 눈에 비친 21세기 국제질서(근간)

NSP 시리즈

- ①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6. 17)
- ②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 8. 4)
- ③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개념 (한용섭 2004. 9. 24)
- ④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10. 22)
- ⑤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 11. 1)
- ⑥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 1. 26)
- ⑦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박철희 2005. 3. 22)
- ⑧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태환 근간)
- ⑨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네트워크 (이상현 근간)
- ⑩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FTA 전략 (정진영 근간)



EAI 후원안내

EAI에서는 EAI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기업·단체 등 누구나 후원이 가능하며 본 연구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EAI후원회에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첨부한 CMS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매월 25일에 자동으로 후원금이 납부됩니다. 또한, 제일은행 436-20-155168 (예금주 :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으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내주실 경우 영수증 발행을 위해 성함과 연락처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EAI 후원금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다 밝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소망을 담아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 혜택 |

회원구분	월후원금	혜 택
세종회원	50만원 이상	세미나와 포럼 참석권, 영문저널 JEAS,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총무회원	30만원 이상	세미나와 포럼 참석권, 영문저널 JEAS,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울곡회원	10만원 이상	세미나와 포럼 참석권, 영문저널 JEAS,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퇴계회원	5만원 이상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삼봉회원	3만원 이상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다산회원	1만원이상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 법인 후원 회원님과 일시불로 후원해 주신 회원님께서도 회원구분 기준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E-mail - hjkim@eai.or.kr FAX - 02-2277-1684

| 후원금 자동이체(CMS) 신청서 양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후원 희망 금액		원	
예금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추천인			

EAI 신|간|소|개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edited by

Jorge I. Dominguez and Byung-Kook Kim

Published in 2005 b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EAI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5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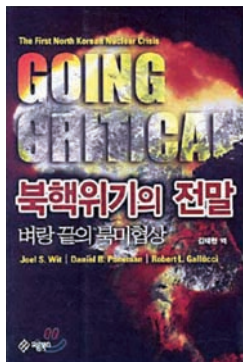
Editor Stephan Heggard, UCSD

Associate Editors

Yun-han Chu · Byung-Kook Kim · Xiaobo Lu ·

Andrew MacIntyre · Yoshihide Soeya

Published in 2005 by Lynne Rienner Publishers



북핵위기의 전말 : 벼랑끝의 북미협상

저자

Joel S. Wit · Daniell B. Poneman · Robert L. Gallucci

역자

김태현(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출판사 모음북스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동아시아연구원(EAI)
Tel. +82-2-2277-1683
Fax. +82-2-2277-1684
<http://www.eai.or.kr>